

‘마구잡이 說說 보도’에 성난 태극기의 절규

“촛불언론아! 어쩌자는 거냐”



태극기의 탄식
신문 덮고
TV도 껐다

“아니면 말고...” 한탕주의 가십에 나라가 흔들려

현장르포

다시 덕수궁 앞으로 갔다. 지난달 1월21일 주말 오후 5시, 지하철 시청역 출구는 주먹 쥔 어른들로 무척 붐볐다. 본지 편집팀이 그들 틈에 끼어들자 태극기를 건네며 어디 가는 길이나고 말을 건다. 머뭇거리다 원로기자들 모임인 大韓言論人 회원임을 밝혔다.

“집회 구경도 하고 취재도 할 겸...왔습니다.” “선생, 기자요? 나, 월남서 죽다 살아난 사람ियो. 지금 이 땅은 40년 전 사이공이요. 북한 노동신문이 우리 언론을 고무 찬양하는 판이니...나, 요즘 티비 끄고 신문도 안 봐요. 온통 탄핵. 촛불에 그것도 왜곡. 거짓 투성이니... 특히 종편은 대통령 사생활이나 뒤지고... 이젠 언론이 아니야, 찌라시지. 시청률 팔아먹으려다 나라 팔아먹는 사태 날 줄 모르나!”

저녁 6시, 시청 일대는 눈이 수북이 쌓였다. 광화문 쪽에서 ‘탄핵’함성이 눈발 속에 들려오고 있었다. 머리띠를 두른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건다.

“저 광화문 소리도 국민의 소리, 우리 목소리도 국민의 소리인데, 언론은 왜 우리 함성은 외면할까요, 답답하고 속상해요” “기자 양반, 나도 한마

디 합시다” 천안에서 올라왔다는 등산모 아저씨는 언론의 정도(正道)강의를 펼친다. “아니면 말고 식 ‘설’(說)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오보정정 한줄 없으니, 누가 언론을 믿겠소?”

발길을 광화문으로 옮겼다. 뜨거운 열기속에 섬뜩함을 느낀다. “북한이 답이다”, “사드 반대” 등등 구호가 난무한다. 이곳이 우리땅인지 헷갈린다.

보수언론인 조갑제씨는 본보 논단(3면)에서 이렇게 외친다. “언론의 (亂)은 언론인이 진압해야 한다. 오보와 날조, 왜곡과 은폐 등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반저널리즘적 작태를 보인 책임자들, 즉 기자, 부장, 국장, 주필, 사장들의 명단을 만들어 언론계 퇴출운동을 원로 언론인들이 벌이면 어떨까?” 간첩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으로 대통령도 될 수도 있다. 잘 속는 국민이 다수가 되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가 훼손당하면 그런 나라는 自淨능력이 마비된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공적(公敵)이 되는 것이다. 한탕주의 언론의 폐해를 뼈아프게 되돌아본 하루였다.

〈관련기사 2~5면〉

이병대 회장 새해의 다짐

헌법가치 · 법질서 지켜 시시비비 모범 정론지로



회우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언론회보가 지향하는 보도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언론인회는 금년 상반기에 탄핵사태에서 언론의 각종 보도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허위과장 보도의 실태를 되돌아보고 진실보도의 실제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기념관 건립계획도 충실하게 추진하여 2월 중에 기념관 관리협약을 은평구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재현장의 목격자들’ 제7집을 간행 시판하여 대한언론인회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회우들의 백내장 무료수술을 비롯해 복지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우 여러분!

우리 회의 일들은 여러분의 협조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원들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아픈 회우, 세상을 뜨는 회우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분이 한 사람을 입회시키는 회원 배가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2017 대한언론인회 정기총회 개최

2017년도 대한언론인회 제31차 정기총회(사진)가 1월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병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내외 사정이 모두 불확실하지만 최순실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언론보도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했던 의료복지, 언론기념관 건립 등은 성실하게 속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원들의 고령화라고 지적하고, 젊은 언론인의 입회 배가 운동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2부 총회에서는 이향숙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이 지난해의 업무보고와 결산보고, 2017년 업무



대한언론인회 제31차 정기총회.

사진= 이철영 편집위원

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집행부의 안에 회원들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올해의 업무 계획은 의료복지 계속, 언론기념관 협약식, 탄핵 정국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이다. 예산은 긴축 재정으로 짜, 연간 1억 5,7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편집위원)



“이번엔 진실을 잡아라”



나라 지키려 나선 태극기 물결 침묵하는 다수들 분노의 인파 태극기는 ‘최후의 城’

태극기는 가슴 속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간직돼 있다. 태극기는 강한 성(城)이요,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堡壘)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절절한 소망을 태극기에 담고 다녔다. 연희전문 1학년 방학 때 고향에 들러 누이 혜원과 동생 일주에게 태극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가슴으로 담고 다니는 태극기의 모양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정부는 순국한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9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지금 우리가 모여 나와 흔드는 이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요, 바로 대한민국이다.

태극기 앞에 서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며 맹세를 하던 국민들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찾아 들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청계광장, 코엑스광장, 마로니에광장, 시청광장을 오가며 주말마다 개최되는 태극기집회는 어느덧 그 어마어마하다던 광화문의 촛불집회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열기는 물론이고, 규모 또한 그렇다. 이 엄동설한 폭설 속에서도 무엇이 이 놀라운 인파를 이끌어 내며 태극기를 흔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침묵하는 세월호처럼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구원하지 못하면 나라는 없다. 언론과 국회,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들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행위로 몰아 억지 탄핵을 이끌어 냈다. 그 배후에 촛불이 있다. 지금 촛불은 대한민국을 불태워 없애겠다고 위협한다. ‘촛불민심’이라며 그럴 듯이 포장한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재벌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붉은 공화국으로 만드는 수순이 그 완성단계에 와 있다며 마지막 돌격명령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촛불은 이제 적나라하게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국회 로비에 여성대통령을 모욕하는 성희롱 풍자 나체상을 전시하고 있다. 마네의 명화를 패러디한 참혹한 그림이



최명우
본회 편집국장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다. 명장 마네가 분노해 무덤에서 튀어나올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악성전시장이자, 표창원 본인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목적과 수단이 우선이다.

촛불집회엔 상상하기도 민망한 포르노그림을 내세워 군중심리를 자극한다. 촛불민심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자충수다. ‘촛불민심’이란 용어는 ‘민심’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어서 여기에 진실한 민심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촛불의 실체를 알면 여기에서의 민심은 민심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게 된다.

촛불은 이미 광우병촛불에서 그 속내가 드러났다. 그 촛불은 꾸준히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다 역사의 언

태극기 거부 민심 대한민국의 逆心아닌가 우국국민 · 애국시민 ‘촛불 꺼야겠다’ 출동

론 · 검찰 · 국회와 함께 다시 촛불잔치를 벌였다. 이 촛불잔치가 커지니 나라가 위태롭다. 촛불이 요원의 불처럼 번져 대한민국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가깝다는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중이다.

보수의 간판을 달고 부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하태경은 황교안 총리를 앞에 놓고 “부역자, 촛불에 불타 죽으려는가”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것이 촛불의 본심일 것이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화

우리 국기는 강한 성이요
나라 지키는 마지막 堡壘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태극기가 묻는다

국회해산 언제하나
특검, 혁명검찰인가
종일 편파 종편인가

파를 거부하면 부역이요, 마침내 이 나라와 국민은 촛불에 불타 죽을 것이라는 경고 아닌가.

태극기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나뉘어 있지 않

다. 지금 촛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터리 탄핵과 무소불위의 촛불, 특검, 정치권을 지켜보자니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애국 세력들이 바보라서 참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 줄 것”이라고 다짐한다. “JTBC의 태블릿 PC조작이 이번 탄핵의 근본원인이 됐다”고 “이들을 처벌하라”며 방통위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줌마 부대의 목소리도 크다.

종편들이 상식에 벗어난 방송으로

의해 가장된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머리 뒤에 걸린 북한 로(노)동당기 한 가운데 촛불이 모셔져 있다. 북한 로동당의 상징이며 김정은을 대표하는 것이 촛불이다. 그 촛불이 민심을 가식하고 나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이들은 촛불의 실체를 알고 따르는 것인가.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

촛불집회에는 태극기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 촛불은 음 즉 어둠의 세력이기에 양의 태극기 앞에 나설 수 없다. 태극기가 두려운 것이다.

우리 민속에 동짓날 팔죽을 먹는 것은 귀신이 붉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보듯 흡혈귀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무서워한다. 악귀를 쫓는 데 팔죽과 십자가가 약이 되듯 태극기 앞에서는 촛불이 힘을 못 쓴다. 태극기 바람이 촛불을 끌 것이다.

촛불이 태극기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심을 내세울 수 없다. 촛불민심은 민심이 아니라 그들 인민공화국의 민심 즉 ‘인심’이라 주장해야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촛불에서 태극기로’의 전환도 두드러진다. 태극기를 드니 애국심이 북돋는다.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태극기를 흔들겠다고 한다. 태극기인 파가 어찌 촛불의 맞불집회일 수 있겠는가. 이 거대한 물결을...

탄핵반대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나선 시민들이 집회에 이어 본격적인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들이 클로즈업된다. 중앙일보사 앞 1호 애국텐트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2호, 새누리당사 3호에 이어 서울시장 앞 광장에 29개의 4호 이른바 애국텐트를 설치하고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한 엄마부대 등은 종편 징계 및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결전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태극기 부대는 나라를 수호하려 나선 의병들이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발통문이 일제치하의 태극기 인파, 3·1 운동을 일으켰듯이 지금은 SNS 디지털통신과 인터넷 방송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태극기 물결을 만들고 있다.

태극기는 신성하다. 태극기는 조국이며, 대한민국이다. 태극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가공할 사태’ 예언 남북이 한 목소리 ‘反 박근혜’ 남북 통일전선 형성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한반도의 모든 정치 사회 현상 뒤에는 남북한 대결 구도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최순실 사태도 이러한 이념적 안경을 끼고 보아야 진정한 실체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대응전략이 준비되면 반격이 가능하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누구 손에 당하는지 모르고 당한다.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의 언론을 극찬하였다는 것은 남·북한에 걸친 반박근혜 통일전선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형식은 反朴통일전선이지만 내용은 反대한민국 통일전선이다.

좌파와 싸워온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조종동, 한겨레, 노동신문을 포함한 남북한 모든 선전 선동매체가 합세한 것이다. 민주국가의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가공할 사태를 부른다.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표출시켜야 한다. 독재를 막는 이 기능이 마비되면 전체주의적 공포분위기가 나라를 뒤덮게 된다. 소수의견, 반대의견이 작아지고 그나마 언론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 여론에 압도적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 여론도 한 방향으로 쏠린다. 여기에 連動하여 국회와 검찰과 법원도 한쪽으로 기운다. 언론-정치-司法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전체주의 체제가 완성된다. 문제는 움직이는 방향성이다. 그것은 북한 노동신문이 칭찬하는 방향이다.

북한 노동당이 좋아하는 방향이다. 즉 공산혁명의 방향이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의 언론이 공산혁명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극찬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이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

북한 노동신문은 왜 한국언론을 칭찬하나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활동은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이다."(북한 노동신문 2016년 11월 23일자)

조·중·동 한겨레 北로동신문 등 남북한 선전 선동 매체들 합세

특검 칼 못대도 휘두르게 격려 전체주의적 공포분위기 조성

이라고 규정한 한국 언론의 행동은 무엇인가? 미국과 손잡고 핵무장한 북한정권을 압박하며 북한의 하수인인 종북세력을 단속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정권이 좋아하는 후보가 남한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신문이 말하는 '정당하고 의로운 행동'인 것이다.

노동신문이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한국 언론의 협조는 무엇일까? 쫓

그리하여 국회도 사실상 단일체가 되었다.

언론과 국회의 단일화는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돕고, 검찰과 특검이 칼을 못대도 휘두르도록 격려하고 있다. 정치와 언론이 검찰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니 무리한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특검은 수사상황을 연일 언론에 흘리면서 세계적 대기업 회장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헌법파괴적 ‘촛불민심’을 서로 다투듯 우상화 촛불시위 주동자들 신분 감취, 사실상 북에 협조

불시위를 주동한 이들의 正體를 감추어준 일이다. 이 세력이 좌경적이며 광우병 난동 주동 세력과 겹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다. 특히 시위대가 따라 부른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가 김일성 찬양곡을 만든 자의 작품이란 치명적 약점을 한국 언론이 알고도 덮어준 점이다.

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촛불시위 주동자들의 정체와 민주혁명적 주장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촛불을 들었다. 한국 언론은 헌법파괴적인 '촛불민심'을 한 목소리로 우상화하였다. 언론은 겁에 질린 새누리당 비박계가 離反하니 이들의 이념적 배신을 덮고 적극적으로 응원하였다.

구속시키려 하였다. 국가예산이 전체제적 예술 문화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성한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이름 붙이고 고위 공직자들을 집요하게 몰아붙인다.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거의 자동적으로 발부한다. 혁명검찰인지 정치검찰인지 모를 과잉수사이다.

언론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상호 비판도 하지 않는다. 오보와 조작을 해도 비판하는 동료가 없으니 마음놓고 한다. 모든 언론이 너무나 많은 오보를 했으므로 서로 비판할 자격도 없었다. 서로가 약점을 잡은 상태의 共犯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언론은 카르텔이다.

대한민국호는 세월호처럼 기울고



김정은 로동당위원장의 로동당기 - 촛불이 심벌이다.

있다. 세월호의 침몰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모순 때문이었다. 過積貨物의 쏠림 현상으로 배가 균형을 잃은 것이 원인이었다. 대한민국호는 언론·검찰·국회가 한 덩어리가 되니 왼쪽으로 쏠리고 있다. 벌써 20도쯤 기울었다. 30도까지 기울면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다.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두 곳이다. 헌법재판소와 행동하는 애국시민들이다. 헌법재판소의 아홉 재판관들이 남북한에 형성된 이런 거대한 단일체의 쏠림에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웅적 용기를 기대해야 하는데, 문제는 영웅을 악당으로 모는 분위기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애국시민들의 시위가 反轉의 불씨이다.

남북한 좌파세력은 우파적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북한정권과 맞서던 대통령을 탄핵소추, 청와대에 유세시키는 데 협조한 셈이다. 탄핵 결정, 즉 우파 대통령 파면은 공산화로 가는 길을 막아주던 1차 댐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댐이 무너지고 쏟아지는 물폭탄에 독 아래 살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지가 관건이다. 그동안 무책임하게 무사안일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각성, "가만 있으면 모두 죽는다"면서 제2차 댐을 쌓고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면 최후의 결전장인 대통령 선거에서 起死回生할 수 있다.

체제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주민들이 나만 살자면서 도망쳐버리면 대한민국호는 선장이 도망간 채 전복되는 세월호의 운명을 따를 것이다.

언론의 亂은 언론인이 진압해야 한다. 오보와 날조, 왜곡과 은폐 등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反저널리즘적 작태를 보인 책임자들, 즉 기자, 부장, 국장, 주필, 사장들의 명단을 만들어 언론계 퇴출운동을 퇴직 언론인들이 벌이면 어떨까?

고참 언론인들이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 쟁취한 언론자유를 공짜로 누리는 현역 기자들이 그 자유를 선동꾼에게 팔아넘긴다.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정신을 타락시키면 국민이 彼我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 간첩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으로 대통령도 될 수도 있다.

잘 속는 국민이 다수가 되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가 훼손당하면 그런 나라는 自淨능력이 마비된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公敵이 되는 것이다.

촛불시위

주도 핵심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반헌법 반국가 단체 수두룩



서옥식

본회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대통령 탄핵·하야·구속을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 구호인 ‘혁명정권’ 수립을 주장하는 주말 촛불시위 주도세력은 누구인가?

지난해 10월말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세력은 종북좌파노동조합인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인 전교조 등이 다. 현재에서 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잔당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등 반헌법, 반대한민국 종북세력들도 대거 참가하고 있다. 북한이 연일 관영매체를 총동원, ‘박근혜 패당의 반민중적 팻소악정을 끝장내자’며 ‘촛불시위확산 민중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정체가 불분명한 헌정파괴세력도 있다. 혁명정권 세우자며 시위에 나선 ‘중고생혁명지도부’가 그것이다.

서울 한복판서 킬링필드 광기 범죄 예행연습

민주노총 중심의 53개 좌파단체 통합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등으로 조직된 4·16연대등은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9일 1천 503개로 구성된 소위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란 연합단체를 조직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해왔다. ‘퇴진행동’에는 서울과 광역시들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시·군·읍·면·동을 포함, 1천 수백개가 넘는 각 지역 지부와 산하조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母)조직을 기준으로 할 때 시위 참여 단체는 2백개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포함한 친북반미좌파 단체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서도 시위에 참가한 대표적인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남측위원회,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등이다. 또한 대표적인 친북좌파단체로 시위를 주도한 핵심세력에는 민주노총을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전국언론노동조합(언노련), 금속노조,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을 비롯해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중연합당, 민중의 꿈, 민중의 힘, 민중행동, 민청련동지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백남기국민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규탄투쟁위원회, 참여연대, 노무현재단, 노사모,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4·16대학생연대, 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톨릭농민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승가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대협동우회, 혁명적 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민족 반역자 박근혜 처단,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거대한 햇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침략군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이석기 무죄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민주노총위원장 한

대부분 북한의 대남 공산화전략 구호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퇴진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과거에도 미군 장갑차 여중생(효순·미선) 치사사건 촛불집회,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반대시위,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 용산참사 추모 촛불문화제, 광주병 촛불난동 시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에 빠짐없이 참가해왔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이같은 시위 주도의 궁극적 목표는 거의가 사회혼란을 통한 정권붕괴와 민중정권 탄생에 있었다. 이들은 정작 촛불을 들어야할 북한의 김일성 가족 3대 독재세습과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비롯 제1연평해전(1999), 제2연평해전(2002),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2008), 천안함 폭침사건(2010), 연평도 포격도발(2010), DMZ 목함지뢰 매설폭파사건(2015)등에는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남측이 잘못해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난한다. 북한이 시도 때도없이 우리 영토(서해 NLL)를 침범하고 핵무기와 미사일로 청와대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개협박을 하는데도 촛불을 들기는 커녕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않는 곳이 이들 단체다.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북한에 의해 ‘혁명의 주력대오’로 지칭된 민주노총은 스스로 발표한 ‘2007 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에서 국가보안법



촛불시위 현장에 등장한 오랏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 흉상과 박대통령 처단용 단두대.

말로는 ‘퇴진’, 궁극의 목표는 혼란조성 체제전복 계급투쟁 통한 자본주의 타도·혁명정권 수립 주장

합연맹, 여성민우회 등이 포함돼있다. ‘퇴진행동’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촛불시위에 참가한 반정부 단체도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10여개 단체가 그들이다. 여기에 ‘광장의 정서’에 편승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가세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일부 비박계 의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참가했다.

‘퇴진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상군 석방, △국정원 해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사망 책임자 처벌, △위안부 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이런 내용 일부가 적힌 피켓과 함께 플래카드가 시위현장에 등장했다. 노동자 위주의 계급투쟁을 획책하고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혁명정권과 연방제국가 수립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들 주장은

철폐,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연방·연합제통일을 주장하면서 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군 사령부 즉각 해체, 한미행정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국정원등 국가 안보기관의 전면적 해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이틀간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이른바 ‘통일일꾼 전진대회’를 갖고 “노동자가 앞장서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1500여 단체

심층분석

정체 불분명한 헌정 파괴세력도

4면에서 이어집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통해 그 같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지금의 소위 ‘민중 총궐기’는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이유로 한 4·19때의 대통령 하야시위와 그 순수성에서 차이를 달린다. 4·19 대통령 하야요구 시위는 말 그대로 참으로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이었다. ‘퇴진행동’측은 사전에 기획된 절차에 따라 치밀한 조직과 인적 동원을 해왔다. 시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란 것은 시위현장의 행태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그 술한 촛불과 깃발·플래카드, 장의행렬, 살기(殺氣)넘치는 처단 퍼포먼스, 고비용의 가설무대와 연예인 동원 등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대통령의 목을 쳐야한다며 등장시킨 기요틴(단두대)

과 대통령의 시신을 메고 가는 상여행렬, 목이 잘려 공중에 높이 들려있는 대통령의 피흘리는 얼굴모형, 대통령에게 사약을 들이붓는 퍼포먼스, 어린 애들이 발로 차고 굴리는 대통령의 얼굴모형이 담긴 대형 축구공, 수의를 입혀 포승줄로 묶어 끌

고 가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형상, 그리고 이들을 무덤에 파묻는 의식, 어린 중고교 학생들이 ‘혁명정권 세워내자’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는 장면 등 등... 혁명을 구실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정권의 킬링필드 광기(狂氣)를 방불케하는 인간에 대한 잔혹한 범죄예행연습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재현되고있다. 이게 과연 하루하루 살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의 진솔한 항거와 분노가 폭발한 자연스럽고 자연발생적인 민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따라 부르고 합창하는 주제는 증오와 적개심이 저절로 묻어나오는 노래이다. 주제가 ‘이게 나라냐를 작사·

류의 태양’, ‘서울에서 평양까지’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전대협 진군가’, ‘Fucking USA(미국 엇 먹어라)’ 등 종북반미 성향의 노래를 만들어왔다. 또한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과 친노(親盧)신당이었던 옛 국민참여당의 당가와 문성근씨가 주도한 ‘백만민란 운동’의 대표곡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애써 외면한다.

물론 최순실씨 국정개입에 분노하고 박대통령에 실망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광장에 나온 상당수는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이란 점이다. 조직적 동원이 있었다는 증거의 예로 친북 좌파 인사 이재정 교육감의 경기도

전 국민의 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들 수 있다. 실제 뉴스통신사 ‘뉴스1’은 지난 해 11월 12일자 광주발 보도에서 당일 광주·전남에서만도 시민단체 회원등 2만 여명이 500여대의 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동원됐다고 전했다. 일본 경시청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조직으로 추정하고 있는 일본의 JR총련 회원들도 촛불시위에 대거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우리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한다. 더욱 개탄스런 것은 증오와 적개심, 반목,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끔찍한 살인과 파괴의 퍼포먼스에 침이 마르도록 ‘국민 축제’, ‘문화 축제’, ‘평화 시위’ 등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여부는 최종적으로 특검과 헌재에서 가려지게 돼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을 틈타 “사회

주의가 정당이고 북한이 우리의 삶이 될 혁명정권 세우자”고 체제전복을 획책, 선동한다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주장들을 방관하고 있는 언론, 정치권, 검찰 등이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버스 500대 2만여명 조직동원 ‘광장군중’ 속으로

작곡한 사람은 주사파 민족해방계열(NLPDR)의 윤민석(본명: 윤정환)으로, H대 무역학과 84학번의 극좌운동권 출신이며 건국 이후 최대 공안 사건으로 기록되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1992년)’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그는 ‘김일성 대원수는 인

교육청이 2016년 11월 12일로 예정된 광화문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하루 전날 각 학교에 내려보낸 학생동원 독려 지시공문, 그리고 당원들의 촛불시위 참가동원을 위해 지구당에 전세버스 비용을 내려보낸 데 반대했다고 스스로 폭로한 김영환

등골이 오싹한 시위 퍼포먼스 사진



민주노총이 2016년 12월 6일 국회의사당앞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 설립을 위해 재벌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800억원은 뇌물이라며 재벌총수와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고교 학생들로 보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중고생혁명지도부’라는 괴조직 이름 아래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구속촉구 촛불시위 현장인 광화문 광장 건물벽에 부착된 “사회주의가 답이다”라는 표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나선 젊은이들이 자본주의체제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자들이 해산판결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사건의 주범 이석기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12일 민주노총 주도 촛불시위 현장인 광화문 광장에 등장한 단두대.

탄핵심판 ‘인용’해도 ‘기각’해도 정치 요동

정부는 계엄령 고려해야 하나



민 병 돈

전 육사 교장
예비역 중장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동(東)아시아의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또한 이와 유사하다. 1905년 일본정부가 동해의 우리 영토 독도를 자국 시마네(島根)현에 무단 편입시킨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점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갖은 악행을 저질렀던 저들이 그대로 우리의 이웃에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깝고도 거북한 이웃나라가 또 있다. 서해 건너 중국이다. 북한의 6·25 남침 후 이른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는 명분으로 1950년10월에 압록강을 건너와 우리를 공격한 북한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후 1990년대에 소련(러시아), 헝가리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맺어 지난 날의 적대관계를 해소했다. 현재 미국과 함께 우리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하여 작년 7월 주한미군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우리에게, 중국 복수비자 편법발급 중지, 중국당국의 전면 금한령(禁韓令) 유포 등 계속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모습이다.

1월20일 우리의 혈맹인 미(美)합중국 대통령으로 공식 경향이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여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최우선 국정기조로 천명하며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추구할 기세이다. 세계질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정학적 악연으로 이러한 이웃 강국들과 교류하며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왔다. 어려운 일이다.

더 어려운 일은 우리 내부에 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내부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자기직분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도급 인사들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결의로 권한정지 상태에 있다. 이는 군대는 있어도 지휘관이 없는 것과 같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극히 위험한 상황에 벌거벗은 채 그대로 노출된 상태와 같은 것이다.

사드 배치만 보아도 국론통일은커녕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사드 배치를 트집잡는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그의 사드 배치 반대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그 배치를 다음 새 정부 출범 후로 늦추라는 의미의 설교(?)를 듣고 온 것을 보면, 국가반역을 연상하게 되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처신인지 한심하다.

요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며

농사짓고 살던 우리의 선인들은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고 하며 “이웃 사촌”이란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의 상호관계는 이와 사뭇 다르다. 친한 듯 친하지 않고, 때로는 갈등을 빚거나 분쟁을 일으켜 마침내 전쟁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인접하여 친한 관계속에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나라들도 대체로 서로 전쟁을 벌였던 씁쓸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

촛불 對 태극기 극렬 대립 70년대 월남 반정부시위 닮아

북한공작원 침투 사실인가 ‘아니다’ 장담할 상황도 못돼



탄핵기각 및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시민들.

빨리 물러나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이른바 촛불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전반의 베트남에서 있었던 극렬한 반정부 시위를 연상하게 한다. 베트남 패망 직전의 모습이 이러했던 것이다. 그때 베트남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들 중에는 북베트남에서 파견한 공작원들이 많았음이 베트남이 망한 후에 드러났다. 그리고 1990년 독일이 통일된 후에 동독의 비밀 문서들이 입수되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독 내에 사회주의 동독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들이 3만 명에 달했다. 그들 중 상당히 많은 이들이 자기가 동독을 위하여 일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

‘역사는 반복된다’...불행했던 1980년 정국 재현하나 성숙한 민주주의 · 엄정한 법치 바로 세울 기회왔다

들이 고위공직자와 지식인이었는데도 말이다.

북한의 최고위층 인사로 탈북해온 故 황장엽 선생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수만명의 북한공작원들이 침투해 있다고 한다. 이곳 자유의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 남파 공작원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서운 느낌마저 든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

오늘의 내대로

이흥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를 결정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정국은 또 한 차례 요동칠 것이다. 만약 대규모 시위나 소요사태가 진정되거나 진압되지 않고 계속되어 1980년 ‘서울의 봄’과 같은 혼란이 지속된다면 계엄령 선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일인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역사의 반

복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37년 전의 그 어마어마하고 불행했던 일들을 반복하게 하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고 분별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안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라의 안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엄정한 법치의 모습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특검, 누구 위한 사냥꾼인가

축제로 위장된 핏발 선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의 광장을 휩쓸고 있다. 신문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궤변으로, 종편은 대통령의 무능과 도덕적 흠결에 대한 낮 뜨겁고 저질적인 고발에 지칠 줄 모른다. 이미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건만 거리와 광장, 신문과 방송은 인간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굿판’에 탐닉되어 있다. 특별검찰은 사법정의의 엄정한 집행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적 야당의 사냥꾼이자 여론의 눈치꾼이 되어 마구잡이식 구속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치권은 백척간두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 수습에 책임을 다하지는커녕, 대통령 탄핵과 촛불정국을 이용하여 조기화될 대권 레이스를 준비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의 환심을 구걸하는 데 여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 넘어 국가체제 정당성에 대한 도전

촛불 세력, 북한에 포용과 굴종 이들이 실질적 진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탄핵사태와 촛불정국의 홍수로 혼란과 위기에 봉착했다. 이 위기는 엄중하게 진단되어야 극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촛불정국과 탄핵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무분별성으로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적 정당성에 대한 도전임을 직시해야 한다. ‘촛불’의 광장정치를 통한 비폭력·명예혁명은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 소주로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혁명적 폭력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70년 근대화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통일혁명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남겨 둔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대의제는 대통령의 통치불능 상태, 국회의원의 광장정치에의 편승으로 심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헌정위기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은 사실상(de facto) 무정부상태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결정이 내려지든 우리는 현재의 혼란 상태보다 더 심각한, 일종의 총체적 카오스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작년 말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에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탄핵의 인용/기각의 향배, 조기화 된 대선정국까지 대한민국은 극심한 헌정적 위기, 이념적 갈등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다.

이 혼란과 위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화’의 위험성이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의한 전복전(顛覆戰), 즉 군사전쟁이 아니라 한국 내의 반정부 세력과 불만 세력을 이용하여 내부로부터 체제를 타도하려는 정치적 전쟁이 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금의 광장정치를 엄밀히 살펴보면 민주화에 편승한 급진 전복세력, 선동적 정치세력, 자칭 ‘진보’적 시민사회세력의 대연합으로 추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광장정치는 북한으로부터 시원(始原)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 침전된 혁명적(전복적) 전체주의의 분출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광장정치는 그 명분과 구호의 측면에서 낭만적, 통속적, 즉 자적 평가로 얼버무릴 수 없는 심대한 기만성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에서 시작되어 작금의 촛불시위를 추동하는 제1의 명분은 ‘국민주권론’이다. 촛불시위의 선두 팻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이다.

이 조항은 일견 참여 혹은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적 명분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주권론의 기만적 해석에 불과하다. 헌법 조항은 주권의 원칙, “응당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제의 조항이다. 이 조항

이미 우리가 목도했듯이 촛불시위의 주된 구호는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요구였다. 미국쇠고기 수입을 광우병 도입으로 선동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다. 국민의 주권적 권리를 들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실력행사가 일상화된다면 다수결주의라는 민주정의 근본제도가 파괴되는 것이다. 소수의 급진세력이 광장에서 국민주권을 전유(專有)한다면 다수 국민들의 진정한 주권은 실종되어버리는 것이다. 촛불의 구호는 국민주권에 대한 편의적 기만이자 다수결주의

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

남북문제에 대한 이들의 주장들은 민족지상주의의 신화에 함몰된 환상일 뿐이다. 이들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가 ‘하나의 민족’ 원칙에 의해 동일한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심각한 인식적 장애에 빠져있다. 이 주장은 근대정치의 괴물 전체주의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통일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해도 좋다는 모험주의적 이데올로기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를 표방하고 촛불정치를 주도한 세력은 인류사의 유례 없는 반동체제인 북한의 전체주의와 전체정권에 비판은커녕 포용과 굴종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결코 진보세력일 수 없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은 세계사적 기준으로나 한국정치의 기준으로나 반동일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민주파는 보수라는 통속적 평가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책임지는 실질적 진보세력이다.

촛불과 탄핵이라는 ‘분노의 굿판’은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 정치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했지만, 진보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적 반동세력의 전복혁명의 수단이 될 심대한 위험성을 수반한다. 이 굿판에 한국의 언론방송은 예외 없이 분노의 여론재판을 휘몰아가고, 국가수호

북한으로부터 始原한 ‘광장정치’ 심대한 기만성 내포 정치적 전쟁 ‘한국사회 전체주의화’ 위험성 경계해야

이 현실적이고 절대적이라 주장하고 광장의 의사를 주권자의 명령이라 주장한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인 ‘대의제’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를 주장하고 이것이 대의제를 초월하는 진리표준이라고 강변 하는 것은 국민주권론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인민주권론이다.

광장의 의사를 신성불가침의 성언(聖言)으로 강변하는 것은 현대판 자코뱅 전체주의이다. 촛불세력의 국민주권절대론은 직접민주주의를 빙자하여 자유민주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려는 음모적 기만인 것이다.

라는 민주주의적 근본제도를 부정하고 국가의 침식을 기도하는 전복혁명일 뿐이다.

이러한 촛불정치는 자칭 진보를 표방하나 그 실상은 동포의 질곡을 외면하고 전체주의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민족지상주의적 반동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선도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촛불정국에서 시위의 주도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까지 사드 배치의 재고, 정권획득 후 평양우선방문을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물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는 극언도 마다않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의 발언인지, 평양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의 발언

의 중복인 검찰마저 여론의 폭정에 겁박당하고 제 기능을 상실했다. 여론의 폭로가 곧 범죄가 되는 사회는 집단적 광기의 야만사회이다. 저들의 광기는 우리 민주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옥죄는 전체주의를 일상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혼돈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첫 걸음은 기만과 선동에 휩싸인 사상과 이념의 혼선을 바로잡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성찰과 각성을 선도하는 지성적 플랫폼의 결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보파에 의한 전체주의 반동파의 구축(驅逐)이 시급하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요즈음 누구나 느끼는 참담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촉발된 작금의 정세는 정권욕에 사로잡힌 정치꾼들 때문에 억지와 선동, 촛불이 뒤범벅이 되어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나라의 품격을 갈아뭇개고 있다. 마치 권총을 빼들고 살육 전에 나선 왕년의 서부극 'OK목장의 결투'를 보는 듯하다. 법치주의의 실종이고, 헌정질서의 철저한 파괴 현상이다.

다시 고개드는 언론 망국론 안보 불장난 즉각 그만두라

옐로 저널리즘 전시장 된 언론 '흑세무민' 앞장

이에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正論)을 펴야 할 언론이 그 본분을 팽개치고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의 본말을 바꾸면서 흥미위주의 화젯거리만 찾아다니는 옐로 저널리즘의 전시장이 바로 오늘의 우리나라 신문·방송이다.

내용을 부풀리는 뺑뺑이, 가십거리, 작은 촌극을 과물 같은 큰 비리로 둔갑시키는 변환술 등 한국 언론 시장에는 지금 손오공의 여의봉을 무색케 하는 온갖 진품들이 등장해 있다. 그래서 제2공화국 때처럼 언론망국론(亡國論)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세력 싸움에 그 운명이 늘 좌우되어 왔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숙명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명에 영향을 끼쳐 왔던 4대강국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그 땅 넓이가 우리(남한)의 98배와 95배, 러시아는 170배, 일본도 3.7배가 된다.

이런 고래 틈바구니에 끼인 새우 격인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은 세 계가 놀라고 부러워 할만한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다.

그런데 지금 이 보람과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려 한다. 우리 모두 대

오각성 해야 할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국가안보에 관한 국론 분열이다. 이것만은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작금의 현황을 보면 탄핵 소환을 틈타 지금까지 애써 구축해 놓은 안보체제를 허물어 보겠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방어할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 개성공단 부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바로 그러한 움직임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과거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문재인이 앞장서 있다.

국가 안보를 손질한다는 것은 적과 동지 관계를 재정립하고 주변

억지와 선동 국론분열 국가위기 불러 나라 품격 갈아뭇개고 법치주의 실종

안보 정치도구로 국가 울타리 흔들기 불난집에 부채질, 도둑질까지 하려나

국가와의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敵)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우리 적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다. 국가통치권을 핏줄에 의해 대대로 세습하는 사회주의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은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어이가 없다. 북한 핵무기 개



최서영
본회 회우
전 코리아헤럴드 사장

무기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한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국제적 공조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햇볕론자를 포함한 좌파 정치꾼들은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어이가 없다. 북한 핵무기 개

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대국 답지 못한 응졸한 짓을 했다.

이에 겁을 먹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허겁지겁 베이징으로 달려가는 추태를 보였는가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까지 중국을 자극하지 말자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판국이다.

19세기 말엽, 서울에 주둔한 청나라 원세개(遠世凱)에게 모든 대신들이 굽실거렸던 조선조 때 일이 연상되는 서글픈 현상이다.

우리나라 안보는 한·미동맹이 근간이다 우리는 적과 동지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6·25의 혹독한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아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것은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 탓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사실이 증명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그만큼 우리 안보는 약해진다. 지금 아시아에 대한 패권 다툼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다.

고래끼리 싸움이 붙은 셈인데 이 틈바구니에서 새우격인 우리가 등 터지지 않으려면 두 고래 사이를 요령 있게 헤엄쳐야 하지만 등

거리 헤엄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 안보를 위해 당당히 나설 때는 나서야 한다. 사드 문제가 생긴 것은 북한 핵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 배치는 원천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이런 해결책을 쓰지 않고 거꾸로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강압책이다.

우리는 이런 정당하지 못한 억지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안보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아 국가의 울타리를 흔드는 불장난은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탄핵 정국을 이용해 나라의 품격을 떨어트리려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가재도구를 훔치려는 도둑질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세태를 고발하고 계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인데, 우리나라 언론이 왜 손 놓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 대접받던 옛날이 그저 그리울 뿐이다.

이러다 미국과 중국 고래싸움 끼어든 새우 될 수도 한·미동맹 금 가면 우리 안보 허약해질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중세기 때의 봉건 왕조체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의 체제 경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겪어왔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은 통계조차 잡을 수 없는 세계 최빈국(最貧國)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격차가 커지고 멸망 위기에 몰리자 그 탈출구를 핵무기 개발에서 찾으려 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수많은 인민이 굶어죽는데도 모든 자원을 핵폭탄 만드는 데 쏟아붓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래서 유엔 결의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대해 돈줄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북한 핵

발을 돕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몇몇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사드 배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첫째는 우리도 핵폭탄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국제협약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수입해 오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사드 문제인데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 반대론자들은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우리나라에 대해 노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화장품 수입 금지, 전세 항공기 취항 거부 등 무역 보복을 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전투기까지 띄워 우리나라 방공식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核파문 ‘군사적 선제타격’인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 취임으로 닷을 올린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은 특히 국제관계에서 세계적 차원으로는 ‘상전벽해’의 변화를,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지난 70년간 지속된 ‘냉전대결’의 틀을 깨는 격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순항 여부에 따라서는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중심’(Pax-Americana) 세계질서의 변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축으로 하여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對북한 정책에 변화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상황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상수(常數)였던 북한의 핵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을 압박하는 최대의 안보 이슈로 남아 있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는, 종래의 미국의 대북정책의 계승·강화를 강조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반감과 ‘후보’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북한 관련 발언에 현혹된 나머지, 때로는 트럼프에 대한 호감까지 표명하면서 한동안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눈에 띄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후보’ 시절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는 현저하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차적 이슈였다. 트럼프의 북한 인식도 지극히 아마추어적이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예컨대 대선 기간 중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득표 운동 수단이었던 7천여 회 이상의 ‘트위트’ 가운데 북한 문제를 언급한 ‘트위트’의 회수는 3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후보’ 트럼프가 언급한 북한 관련 발언 내용도 김정은(金正恩)을 ‘악동(惡童)’ 또는 ‘미친 녀석’이라는 비칭(卑稱)으로 호칭하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중국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으니 까 중국의 팔을 비틀어서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은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식이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는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이 같은 중국의 비협조가 지속될 때는 “중국 상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업포도 놓았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험부담 수반해도 군사작전 성공한다면 한반도와 주변 새로운 ‘지역 질서’로 대체

을 만나서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그를 설득하여 북핵을 포기하게 하겠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횡설수설’에 기대를 건 나머지 한 때는 트럼프를 ‘똑똑한 정치인’이라던가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호칭하면서 그의 당선을 선호하기도 했다.

‘후보’ 트럼프의 한·미관계에 관한 발언도 종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데도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서 “(NATO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그만 두고 합당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가 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자위(自衛)를 위하여 핵무장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하기도 했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불평등조약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보’ 트럼프의 이 같은 무책임한 ‘방언(放言)’은 그의 신분이 ‘당선자’로 바뀌고 안보 분야 각료(들의 인선이 진행됨에 따라 급변하고



이동복
전 한국일보 기자
15대 국회의원

틸러슨 국무 및 매티스 국방장관 및 폼페오 중앙정보국장과 플린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적’이면서도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이름 아래 북한에 대한 외교와 경제적 압력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 왔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의 추진을 입을 모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시점에서 북핵 폐기 강요를 위한 방안으로 유엔안보리의 제재 조치 추진과 함께 트럼프가 강조하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요하는 방안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의 동시 추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안보 관련 각료 내정자들의 강경한 대북정책 예고 발언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강

체를 동원하여 “ICBM 시험 발사가 임의의 시간에 강행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평가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이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대형 군사용 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과 “2~3년 내에 ICBM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험발사가 아닌 무기화까지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야에서는 최근 북한이 개발하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 본토에 도달 가능한 ICBM이 무기로 실전 배치될 수 있는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가 점차 민감한 이슈로 등장하여 궁극적으로 ‘선제타격 대상’과 동원될 ‘무기체계’에 관한 설왕설래를 포함하여 “군사력에 의한 선제 타격”론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힘을 받고 있다. 결국 이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핵과 미사일 개발 불포기의 지를 다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실제로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지에 도달하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외 정책에서 내세운 선거공약 이행의 담보로 여론의 지지가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한국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동의 여파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한 ‘친북 좌파’ 정권의 재출현과 이로 인한 ‘한미동맹’ 파탄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회심(回心)의 국면 타개책으로 이르면 금년 중에 재래식 비핵 첨단무기를 동원하는 선제적 군사타격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와 시설을 파괴, 제거하는 선택을 고려할 가능성의 문

호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트럼프의 선택은 중국과 북한의 반발

한·미동맹 파탄 땀 北 ‘회심의 국면 타개’ 공작 가능성 높아

있다. 트럼프의 ‘안보’ 관련 각료 인선은 ①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엑슨 모빌 석유회사 회장), ② 국방장관에 제임스 매티스(예비역 해병 대장), ③ 국토안보장관에 존 켈리(예비역 해병 대장), ④ 중앙정보국장에 마이클 폼페오(하원 정보위원회 위원) ⑤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에 마이클 플린(예비역 육군 중장), ⑥ 국가정보국장에 댄 코츠(상원의원) 등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상원 인준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 이들 트럼프 내각의 안보 관련 각료 내정자들은, 트럼프와 함께 ‘친러시아’ 성향 때문에 상원 인준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의 경우를 포함하여,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강경 일변도의 입장 표명에 입을 모으고 있다.

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트럼프의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심지어 ‘하나의 중국’ 정책까지도 카드화할 기미를 보이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공조 대열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무역전쟁 불사”론도 들먹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그 동안의 자제를 거두어들이고 다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꺼내 흔드는 강경노선으로 복귀하고 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1월1일 TV로 중계된 신년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중단 없는 계속 추진”을 다짐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연일 각종 선전 매

체를 유발하는 등 위험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① 3대 째의 전근대적 세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김씨왕조(金氏王朝)’ 체제의 내파(Implosion)를 유도하고 ② 한국 정치의 좌경화(左傾化)를 견제하며 ③ 중국에 의한 ‘기정사실화’ 수용을 통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시대착오적으로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의 ‘구체제’를 일시에 허물고 이를 보다 생산적인 미래지향형의 새로운 ‘지역 질서’(Regional Order)로 대체함으로써 이미 시한(時限)이 지난 ‘전후체제’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벤처 투자형 기대 수익에 점점 더 구미를 느끼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초강경 대응 일본에 맞싸움 밖에 해법 없나

한·일 사이 쏘기 ‘소녀상’ 갈등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시민단체에 의해 설치되는데 항의하여 1월 6일 주한일본대사 및 부산주재 총영사의 일시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협회의 중단을 비롯한 4개항의 대항조치를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NHK와의 특별대담에 나와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들어 “국가의 신용문제”를 들먹이면서 “한국 측의 성의”를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해결합의(2015년 12월 28일)가 1년이 가까워지자 작년 12월 한국정부에 대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문제”라고 의례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정부는 격앙하여 「대사 송환」이라는 초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강경대응과 아베 총리의 ‘국가신용 문제’ 거론 등은 외교적인 과잉반응이요 결례이다. 일본의 유력일간지 아사히신문은 1월 7일자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외교공세는 과격하고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 「성급한 대항보다 숙고(熟考)」를 제의하면서 “이처럼 성급하고 광범위한 대항조치로 치달는 것은 냉정을 잃은 것이며… 과잉반응은 오히려 관계악화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우익 성향의 신문들은 아베 정권의 대한(對韓)강경조치를 두둔하고 나섰다. 종립적인 나혼케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하게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응이라 하겠으나, 한일관계가 다시금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총영사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측 공세의 배경을 분석해보면, 국내 및 대외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전략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첫째 對韓 외교의 방향을 공격적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일본은 그 동안 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역사인식과 사죄문제에 대해 한국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끌려 다니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일외교는 “위안부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는 「위안부 외교」로 일관해 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 3년여 동안 시



정구종
보훈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새해 초부터 한국은 북한의 한발 더 나아간 핵 위협과 중국 의 한·미 사드 배치결정 보복 및 일본의 소녀상 이전 압력 등 주변국들의 안보·외교 공세 앞에 시련을 겪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 중심이 흔들리는 혼란 속에 한국에 가해지고 있는 이 같은 외교적인 압박과 도전은 대선을 앞둔 각 정당과 관련단체 및 차기 대권후보들의 대중융합적인 언행이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소녀상 문제는 지방의회의 「독도 소녀상」 추진으로 한일 간에 가장 민감한 영토문제까지 확대될 움직임이어서 파장이 심각하다.

일본, 트럼프에 새 메시지 전달하려는 의의도 미국도 책임있다 넘지시 암시하는 외교전술

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대여섯 차례나 가지면서 일본과의 현안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만나주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문제 등 역사문제해결에 응하도록 움직였다.

그 결과 2015년 11월 한·일정상회담이 새 정부 출범 3년 만에 열렸고, 그 해 12월 28일 위안부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1년이 되자 일본 정부는 소녀상 이전에 “노력 한다”고 약속한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설

비협약 22조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으며 민간단체와 협의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합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1월 13일 국회에 나와 “상대국 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국제관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 동안 외교부가 위안부합의 이행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일본이 소녀상 문제로 한국 정부에 대해 초강경의 대항조치를 취하는 두 번째 배경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새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라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대립과 갈등을 계속하자, 아베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했다.

아베총리는 미국의 요청과 「압력」에 따라 위안부문제 합의에 응했고 총리 자신의 사과를 담았으며 10억 엔도 출연했는데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한국 책임론」을 미국에 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은 「불신용 국가」 한국에 있으며, 미국도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넘지시 암시하려는 외교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소녀상 이전 외교공세의 세번째 배경으로는 일본 내 보수세력의 일체화를 가속화하는 내부결속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번 소녀상 강경대응 후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5~6%나 뛰어 65~67%를 기록함으로써 취임 직후의 최고 지지율에 육박하고 있다.

거기에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겠다는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는 일본의 모든 신문·방송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아베 정권의 對한국 외교공세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장수 총리를 노리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한·일 현안에 대처함에 있어서 더욱 버거운 상대에 힘을 실어 주는 격이다.

한국정부도 차제에 대일외교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강경대응이 지나

친 외교공세라고 비판한 아사히신문도 소녀상 문제의 개선을 향해 “한국정부는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위안부 합의’ 뒤집어버리겠다는 야당 겨냥한 사전포석 상대국 공관에의 ‘안녕과 품위 지킬 의무’도 고려해야

치를 방관했다하여 한국 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공세로 나왔다.

한국의 국정공백 혼란기에 가해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외교공세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이기도 하지만, 위안부해결 합의를 뒤집겠다는 야당과 대선후보들을 향한 사전 경고의 뜻이 강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한·일간에 합의된 「불가역적(不可逆的) 합의」를 깨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 하겠다. 이 같은 일본 측의 공세 앞에 한국은 합의의 이행여부를 신중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미디어들은 소녀상 이전에 노력한다고 한 합의가 철거의 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국 공관에 대해 「안녕과 품위를 지킬 의무」를 규정하

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무역과 안보면에서 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적 요구와 개입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남중국해 사태 등 對중국 정책을 비롯한 안보면에서도 동맹의 대가를 더 지불하라는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개발지지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 결속을 위해 한·일 양국에 대해 안보협력 긴밀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미국 새 정권의 예상되는 동아시아 정책 변화는 한·일간의 관계강화를 압박하는 배경이 되고

녀상 외교 공방에 양국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새 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일의 외교대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녀상 갈등은 한·일간의 역사인식문제를 넘어서 자칫하면 한·미·일 공조의 근간을 흔드는 폭발력을 가진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북핵의 대응, 사드 배치 문제 등 안보협력 차원에서 한·일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체결한 상태이다.

국정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한국이 주변의 냉엄한 국제정세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정치인을 초월한 거국일체의 확고한 대일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안보 주권 어디 갔나

중국의 사드 반대에 편 들어준 굴욕 의원 외교 사대주의 행각

중국의 대한(對韓) 강경정책은 일부 화장품에 대한 금수 조치도 뒤따랐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을 발동, 우리 연예인의 중국 TV 출연과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 진출 기업체들에 대한 가혹한 세무, 소방안전, 위생검사를 자행했다. 새해와 춘절의 유커 방한을 제한하기 위해 예정된 전세기 운항을 금지하기도 했다. 대국으로 굴기(屈起)했다고 자랑하는 나라의 행동치고는 좀스럽고 치사스러운 짓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그들이 단계적으로 전(全) 방위적인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중국은 사드 관계를 협박하려는 김장수 주중 대사의 고위층 접견을 회피해 왔다.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중도 막아왔다. 일방적으로 정부 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연말엔 사드 문제를 담당했던 천하이(陳海) 외교부 부국장을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서울에 보내 우리 정계와 재계를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사드 반대 여론 확장을 획책하게 했다. 그는 우리 대기업 인사들에게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무역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되겠느냐?”, “단교(斷交) 수준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라는 방자하고 무례한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이같이 한국과의 외교·통상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사드 문제를 들고 방중, 왕이(王毅) 외교부장, 쿵위안유(孔鉉佑) 부장조리(차관보급) 등을 만났다. 이례적인 환대를 받고 돌아온 그들은 “주중 대사나 국가안보실장도 못 만난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것은 의원 외교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사드 문제로 우리 정부를 왕따시키려는 중국의 노획한 이간책에 놀아난 것도 깨닫지 못한 듯 희희낙락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정작 그들은 중국의 경제 제재를 중지하겠다는 아무런 언질도 받아내지 못했다. 사드 배치의 원

한국의 사드(THAR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 제재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사드 배치에 합의한 직후부터 중국은 한국인 대상의 상용(비즈니스)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가 하면, 한국산 설탕과 화학제품에 대한 반(反) 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한영탁
본회 회우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경제 제재의 중지 언질 받아내지 못해 중국 측의 억지 주장만 재확인한 결과

노획한 이간책에 놀아나고도 희희낙락 외교부장 만났으니 ‘큰 성과’ 자화자찬



인을 제공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제동을 걸겠다는 어떠한 다짐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주권에 관련된 핵심 이익에 배치된다는 중국 측의 억지 주장을 재확인하고 왔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

겠느냐고 물어본 어리석은 과거 행보를 연상케 한다. 결국 국가 안보 위협을 망각한 더불어민주당의 저자세 의원외교는 현재의 우리 정부와는 소통을 회피하다가 사드에 반대하는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과 손잡고 이를 폐기

미군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 취해진 자위적인 조치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우리의 안보 주권적 결정이다.

중국이 자기네 안보를 빙자하여 시비 걸고 있는 사드는 결코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사드는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고도 150km, 사정거리 200km 마지막 낙하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체계일 뿐이다. 이는 북의 단거리미사일이나 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보완용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사드 레이더의 탐지 기능이 1,500km에 달해 중국 일부도 관찰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다.

중국은 바로 그 정보데이터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에 연결된다고 지적, 한국에 주권 간섭적인 생트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런 몽니를 부리는 중국은 동북 3성(省)에 전 한반도를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와 한반도를 겨냥한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배치해 두고 있다. 우리가 이를 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면 중국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사드 배치 결정은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부의 통치 행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위층과 만나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달 16일 송영길 의원은 4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더불어 정부에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미간에 이뤄진 외교적 합의를 여소야대의 힘을 빌려 초법적(超法的) 수단으로 파기시키려는 수순이다.

미국과의 사드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릴 경우 한국의 외교적인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와 성장을 굳건히 지켜준 한·미 안보동맹 체제도 와해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해체시켜 한반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중국과 북한의 오랜 노력은 성공하게 된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고립무원, 벌거숭이 처지로 남게 될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시나리오이다.

한·미간 외교적 합의 초법적 수단으로 파기시키려는 수순 중국의 광범위하고 더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도

부가 미국과 맺은 사드 배치 합의를 번복시키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계락을 왕이 부장한테 고해바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굴욕적인 사대주의 행보는 어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청와대 재직 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표결을 앞두고 북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

시키려는 중국의 속셈에 동조, 이를 강화해준 꼴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서 이는 임박한 한국의 대선 앞두고 중국의 광범위하고 더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드 도입 결정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미디어

‘태극기 집회’는 ‘맞불 집회’ 아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이제 우리는 정녕 선진국의 문턱에서 다시 옛날 질곡의 세월로 되돌아가야 하는 운명인가.

국내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은 중국의 편을 드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 민주당 송영길, 박정, 유은혜 의원 등 7명이 사드와 관련, 의원외교를 한다며 중국을 방문해 파란을 일으켰다. 조선은 ‘중, 사드 이간계에 말려든 제1야당’이라는 1면 기사에서 “...사드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우호적인 야당을 활용해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이간지계’에 제1야당이 장단을 맞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은 이들의 방중에 대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중국에 가서 활동한 사실만 평면적으로 보도했으나 ‘신중하지 못한 민주당의 사드논의 방중’이라는 사설에서는 “...한·중의 공식 외교 채널이 꽉 막힌 상태에서 민주의원들이 중국을 간 것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도 바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한·중 갈등 낮추려는 의원외교에 보수는 ‘굴욕’ ‘매국’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작년 8월에도 던 민주 초선의원 6명이 사드 문제로 중국에 갔으나 이용만 당했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반성하는 소리가 높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월 9일 미국에 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당시)와 만나 “한·미 양국은 사드를 반드시 배치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중앙은 1면 ‘사드 갈등 키운 안보맨 김관진’이라는 기사(뉴스분석)에서 “워싱턴에서 한·미가 사드 공조에 나서자 베이징에서 한·중 관계를 흔드는 파열음이 나왔다...”며 우리의 안보보다는 사드를 둘러싼 분쟁이 거칠어질 것과 중국의 반발을 더 걱정했다.

이에 반해 조선은 “민주당, 안보실장 방미 비난 말고 독려해야 하지 않나”라는 사설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김 실장의) 대외적 활동은 탄핵제도 위반이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신문시평



김광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부장

집회 현장취재하는 기자정신 어디로 갔나
재벌개혁론 광풍으로는 일자리 못만든다

市행정보다 ‘대선잣밥’ 더 관심있는 시장들
김관진 안보실장 방미 누가 비판할 수 있나



지난 1월 7일 촛불집회에서 시위자들이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억지구호의 대형 조형물을 들고 현재 쪽으로 행진했다.

고 했는데...대통령 공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실장마저 미국에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다. 언론들은 ‘태극기 집회’를 ‘맞불 집회’라고 표현하고 있다.(일부 매체는 요즘 ‘태극기 집회’로 정정) 기자는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하고 현장의 생생한 취재가 생명이다.

필자는 탄핵정국의 실체를 조금

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이들 집회에 나가 보았다. ‘촛불 집회’는 이미 넘치도록 많은 보도가 있어서 ‘태극기 집회’를 유심히 보았다.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맞불 집회’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무엇인가 다른 일면이 보였다. 혹한을 무릅쓰고 참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다면 과장일까.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최근 들어 ‘태극기 집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열기도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언론들이 두 집회의 참가자 숫자를 왜곡 보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월 14일의 ‘촛불집회’에 대해 “한파속인 14만 촛불, ‘재벌총수 구속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본문에서는 이 ‘14만명’이 주최측 주장이라고 썼다. 그런 주장이면 숫자가 엄청나게 부풀려졌고 필자가 보기에 크게 과장됐는데도 제목에 ‘14만 촛불’이라고 버젓이 썼다. 최근 언론이 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탄핵정국의 와중에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연일 언론보도를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조국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언론들은 자칭 대선주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보다는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언어의 파편만 주워 담아 보도하기에 바쁘다.

박원순·이재명씨의 경우 현직 시장이다. 이들은 촛불시위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타나거나 인기발언을 한다. 이런 중에 한 국경제는 ‘재벌개혁론 광풍...반기업 정서로는 일자리 못만든다’는 사설에서 “대선 주자들이 재벌개혁을 외치고 야당은 기회를 잡은 듯 대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규제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를 마비시켜 일자리를 날려버릴 규제 대못이 속속 박히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 나중에 무서운 시장의 보복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면 톱에서 오피니언면으로 이어지는 ‘대선주자들, 이런 경제관으로는 젓과 꼴이 아닌 가난과 실업만 흐를 것’이라는 사설에서 “국가의 부는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자리도 소득도 기업이 만드는데, 희망 없는 비전만 갖고 무엇으로 삶을 꾸릴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달의 사진

‘모르쇠’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168회 이달의 보 방어막 친 우병우’를 선정했다.

이달의 사설

조의연 판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을 해준 셈”이라고 매도했고, 민주당 대선 주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를 향해 이다.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다” 운운의 등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 누구나 찬·반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영장 그것이 법리적 근거 없는 감정 배설로 빚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 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은 법조계에서도 예상해온 대로라며 공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리와 증거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판단 기준

일부 시민의 인신공격도 야당 일각의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장으로 취업해 돈방석에 앉을 것’ ‘대학 생었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 등 동’까지 벌이고 있다. 법치 부정에 앞장서 없다.

외부 독자 정기

후원비 우송료

지난해부터 회보 편집에 신선한 바람을 게도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 새해 1월 10 우연히 대한언론 12월호를 읽고 정기구독

그리고 주변 친지들에게도 권하했다며 2 난해에도 서울 강남과 대구에 거주하는 일 중이다. 1월13일에도 이성죽(강동구 길동)

광장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방어막 친 우병우

‘뉴스1’ 손형주 기자



도사진상에 ‘뉴스1’ 손형주 기자의 ‘모르쇠

에 대한 野일각의 도 넘은 비난은 法治 부정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서기장(野黨) 일각의 비난이 도(度)를 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인정하자”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법이 정의의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부회장은 “법치(法治) 부정(否定)이다. 법관에게 법으로 삼으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법원과 무관할 리 없다. 법원이 나서 “전혀 무관하다”는 조 판사가 앞으로 삼성그룹 법무실 직원부터 삼성 장학생이어서 배신할 수 없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파면 촉구 서명운동’을 선동하면서 정치 지도자를 자처할 순 없다. (문화일보 1월 20일)

구독 신청 섀도

수준 연 3만원

일으켜온 회보 대한언론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거주 김명애씨는 신청을 했다. 10부를 요청해서 25부를 우송해주었다. 지인 반인이 정기구독을 신청, 연 3만원에 구독비를 납부했다.

종편이 어지럽다...걱정이다

방송시평



유자호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파리 특파원

문의 촛불 시위 때 경찰 버스 50대가 파괴됐다는 동영상도 허위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 차단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가짜 뉴스 소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 엄단을 다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짜 뉴스와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퍼뜨리는 언론의 행위를 ‘대변기호증(대변에 집착하는 증상·coprophilia)’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에 의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신년 정초 비서실장과 점심 중이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15분 뒤에 보자고 갑자기 통보했다. 촬영, 녹음, 녹화는 안 된다는 홍보수석의 전언이었다. 기자들은 “완전히 엮였다”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꾸밈을 들어야 했다.

강력한 제약적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완전히 엮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정유라 경찰 고발 JTBC에 쓰러린 물음이...
기자 이전 사람으로서 할 일 먼저 아닌가

‘조작 13초짜리 영상’에 반기문 퇴주잔 파문
짜집기 전엔 술을 버리는 장면 포함돼 있어

말이다.

JTBC의 특종 이후 유럽 특파원들이 울버린으로 몰려들었다. 한적했던 소도시의 경찰서는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녹음하는 한국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현지 검찰은 한국 기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강제 송환에 항소로 응하고 있는 정씨는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의 관행상 언제 귀국하게 될지 모르겠다. 기자의 취재 윤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사건이었다.

TV조선은 SNS를 달구었던 동영상 상을 들어가며 논전을 벌였다. 반기

로 변명하는 대통령과 그것을 돕는 비서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청와대 기자단은 그날 간담회를 거부해야 했던 것 아닌가? 앞으로 또 그런 제안이 있으면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동안 쌍방향 기자 회견을 하지 않았다. 이제 박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은 특검이나 헌법재판정에서 일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 18일 퇴임 회견에서 말했다. “기자들은 대통령에게 아침하면 안 된다. 대통령인 나에게 회의적인 시각으

난무하는 ‘SNS 페이크’...정통언론이 바로 잡아주어야

이 특종은 ‘기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쓰러린 물음을 제기시켰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 때 분신자살을 기도하는 승려의 모습을 지켜보며 촬영한 외신 기자, 터키 해안가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아기 쿠르디의 시신을 촬영한 통신 기자에 대한 비난과 같은 영역의 물음이었다. 승려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인가? 아기의 생사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기자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인가? 이번 경우, 기자는 기다리고 기록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비록 정씨가 국민 밭상이긴 하지만

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성묘를 하는 모습이었다. 반기문 씨가 퇴주잔을 마셨다는 시비였다. 사회자와 논객들은 집안 관습이니, 지역 관습이니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그것은 조작된 13초 짜리 영상이었음이 드러났다. 1분 40초짜리 동영상에는 음복하기 전 술을 받아 원을 그리며 잔을 두 번 돌리고, 술을 버린 뒤 다시 받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검증이 필요했던 ‘짜집기한 동영상’이었던 것이다.

요즘 SNS에는 검증되지 않은 동영상들이 난무해 자칫하면 방송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1월 14일 광화

로 거친 질문을 하는 게 맞다. 사정을 봐줘서도 안 된다. 언론이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던져야 백악관에 있는 우리도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전했다. 오바마의 ‘언론학개론’은 대통령 취재의 지침이었다.

요즘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종편의 무질서한 시사평론들을 우려한다. 아예 종편을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 돼서 태극기를 들고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다. 2017년의 대한민국. 어지럽다.

촛불민심, 민주주의 본질 아니다

길거리 합성이 재판독립성 압박

최순실 국정논단에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에 대한 하야요구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싶었으나, 상황은 여전히 소용돌이 속이다. 현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기도 전에 탄핵찬반 집회가 기 싸움을 벌이는 듯하고, 정국은 조기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불안이 더욱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조급한 정치세력들에 의해 검찰의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에다 특검도입까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다 쏟아져 나온 형국이 되었다. 초유의 정치적 쓰나미라고 말해도 좋을 듯싶다.

촛불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반이 원칙과 중심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물결에 휩쓸려가는 형국이 되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도 애초의 방향을 놓친 채 정치적 쇼프로그램 수준을 방불케 했다. 그나마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빈약한 무대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특검은 어떠한가? 역시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상시 특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최순실-박근혜 국정논단 수사를 위한 특검을 규정한 이번 특검법은 다분히 야당의 입김에 강하게 이끌린 결과, 정치색이 농후한 입법의 전철을 밟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체적 정의를 외치는 광장의 촛불을 의식하여 행보를 잡다보니 여기에도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하거나 과속질주로 쏘아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만한 조짐들이 엿보인다.

언론의 관심도 온통 특검과 탄핵심판에 쏠려 있다. 언론의 행태만을 보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드러내놓고 대통령 죽이기에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이다. 문제는 언론이 점점 더 과열되어가면서 스스로 절제할 줄도 모르고 과잉보도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거 없는 소문과 해괴한 추측성 또는 허위기사들까지 범람하지 않나, 이렇게 가다간 행여 정제되지 않은 여론재판, 민중재판으로 사람 죽이는 일까지 능사로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마치 중세의 암흑시대에 횡행하던 마녀사냥이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21세기의 개명 천지에 극동의 조그만땅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만에 하나 특

최근 몇 달 사이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광장정치가 제도권 안의 의회정치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테지만, 우선 대통령의 지도력 파탄과 여당의 지리멸렬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야당주도의 특검법 정치색 농후해 사회 전반이 원칙과 중심에서 벗어나

검이나 탄핵심판이 음습한 마녀재판 같이 흥분한 촛불민심이나 편향된 여론몰이에 휘말려 장막 뒤에서 엮어내는 정치색 짙은 사법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건 시대착오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위험이 아닐 수 없다.

촛불민심은 아무리 그 진정성을 미화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일 수 없으며, 일시적인 현상이 상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을 혹 국민의 의사나 민주주의를 대신할만한 어떤 힘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이 땅에 히틀러 같은 괴물도 등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의 광장촛불은 단지 탄핵심판의 종료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꺼질 운명의 촛불이라는 점에서 잠시 강렬한 사실상의 힘일지는 몰라



김 일 수
고려대 명예교수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하자.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특검의 제정을 야당에게 독점하게 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하도 다급하다 보니 여당이나 대통령이 법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시비할 여력이 없는 처지에서 정치적인 성격의 입법으로 급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알리는 일일 보도행태는 몇 가지 점에서 운용상의 묘를 살려 절제미를 가미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성격에 무비판적으로 포로로 잡히는 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 수준이 선진국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미개국 수준 밖에 안 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유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어떤 피의자라도 무죄의 추정 아래 있

권감수성이 높아져 갈수록 더욱 그렇다. 어떤 피의자에게서 프라이버시까지 발가벗겨 드러내 놓으려는 어떤 사회적 경향은 음란하기 짝이 없는 집단관음증의 일탈된 탐욕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도 관저 내실에 침대가 몇 개이니, 머리를 만지는 데 몇 분이 걸렸는지, 점심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는지, 그런 유의 접근법 자체가 한 여성을 마녀화하고 인격살인을 가하려는 아주 불온한 말의 씨들이다.

또한 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피의사실 공표는 최소화되거나 절제되어야 한다. 원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의사실에 공표되어 언론에 실리게 되면 그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는데다, 무죄를 위한 투쟁의 심리적 전의를 약화시킬 위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 개인의 명예와 자유의 이익이 우선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특검의 권리도 의무도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또 절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숙고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무죄추정 및 신체자유와 우선성과 방어권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인신구속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 밖에도 증거 수집을 위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절제되어야 한다.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것은 병가의 상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밤샘수사와 만에 하나 억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수사 태도도 절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원리와 절차원칙들은 실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류 공통의 보편적 법문화유산이다.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라면 광장과 길거리의 합성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몹쓸 짓을 한 범죄 혐의자라도 여기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일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들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 같은 전통적인 인권보장의 내용들은 자연권이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하여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언론들, 대통령 죽이기 암묵적 카르텔 형성했다 특검은 참새잡기 위해 대포 쏘듯 무차별적 수사

도 일시적인 범주에 제한된 것일 뿐이다. 거기에서 무슨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온갖 시도는 단순한 수사학적인 논증의 차원을 넘어 보통사람들에게 착시적인 환상을 갖도록 오도할 위험이 크다. 특히 객관적이어야 할 수사권과 재판권력, 그리고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언론권력들은 이런 유혹에 휩싸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밀려드는 비등한 광장의 목소리와 편향된 언론의 여론몰이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란 다른 아닌 법의 근본원리와 절차적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충실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특검의 수사와 매일 이어지는 보도행태의 문제부터 짚어보기로

으며, 이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서 피의자가 누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리들은 특검에 의해서도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언론이나 어떤 촛불광장의 힘으로써도 이를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려 들어서는 안 된다. 가리려는 얼굴표정을 굳이 들춰내어 뻔뻔하다느니, 묵묵부답으로 드나든다고 오만하다느니 그런 언술들을 퍼뜨리는 행태는 실로 천박하고 부주의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가령 최순실 일가가 백성들에게 아무리 극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치더라도 피의자로서 그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과 기본권의 인격주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의 인

19대 대선보도 이대로 가면 또 후회한다

이제 대통령 잘못 뽑으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 언론보도는 각별히 중요하다.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책과 공약 검증이다.



사실 선거에서 정책얘기는 인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표방하는 한 꼭 해내야 하는 과제다. 재미있는 것이나 시청률 확보에만 치중한다면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직무유기이다.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도 없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정책과 공약이다. 2002년 대선 때 다분히 득표용으로 들고 나온 행정수도이전 공약으로 한국은 지금 행정대혼란과 엄청난 국가적 낭비를 겪고 있다. 우리 선거사에서 검증부족이 불러온 대표적 재앙이라 하겠다.

4~5월선거가 기정사실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꿀을 퍼붓듯이 달콤한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다 듣기 좋은 말이다. 경제분야만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막을 수 없는데, 그런 시각에서 후보들의 체계적 공약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또 개헌과 정치개혁을 말하지만 지향점이 무엇인지, 핵심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해 후보들을 추궁해야 한다.

즉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로 대통령권력만 분산시키면 좋은 개헌이고 개혁인가. 중요한 문제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일 것이다. 이걸 막으려면 권력에 대해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권력남용과 부패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사자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좋은 결과가 아니다.

실업과 일자리, 복지 같은 문제는 이해관계가 손에 잡히지만 안보는 일응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관심사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나면 경제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목하 공약시장에 나와 있는 사드반대와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 한미관계를 위협할 것이다. 금강산

여행 재개, 서해NLL수역 공동어로, 작전지휘권 회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 등 국가운명과 직결된 문제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꼭 반미니 친미니 하고 편가르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드문제는 북핵대응책뿐 아니라 우리 안보를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으로 등장했다. 한·중관계에도 중대한 분수령이다. 중국의 길들이기에 복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보복을 감수할 것인가를 선택

해야 한다. 물론 중국도 조폭같은 수법을 계속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보수나 진보나 하며 세월 보내지 말고 어떤 것이 국가이익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또 개성공단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당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도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구 월 환
본회 회우
전 연합뉴스 상무

묵 먹고 악수하고 사소한 제스처와 언변들을 중계하느라 바쁘다. 퇴직잔을 그대로 마셨다 안마셨다. 환자에게 죽을 어떻게 떠먹였느니 전철표를 어떻게 끊었느니...이 귀중한 시간에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SNS에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얘기들, 시시콜콜한 잡담수준

각 있는 언론은 가급적 이것을 피하려는 추세이다. 우선 부정확하다. 이걸 이미 영국이나 미국같이 여론조사가 발달한 곳에서도 비판이 많지만, 우리는 더하다. 이름 있는 방송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합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마저 너무 빗나가 무용론이 빗발쳤다.

당장 지난 4·13 총선에서도 거의 다 틀렸고, 다른 총선에서는 근 40개 선거구의 당락예측이 개표결과 뒤집혀 난리가 났었다. 방송국의 출구조사에서 낙선으로 나오자 절간으로 도망간(그때는 낙선하면 빗쟁이 때문에 피신하는 일이 많았다) 당선자를 찾아내느라고 사무총장이 진땀을 뺀 일도 있었다. 요즘 보도를 보면, 심지어 영점 몇프로의 차이까지 짚어가며 열을 올리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는 별것도 아닌 차이를 큰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과장하여 유권자를 오도하고 주권자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킨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와 건강한 민주주의 형성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거의 매일 일일이 등수를 매겨 요란하게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은 선거의 주체가 아니라 마치 경마장에 앉아 있는 구경꾼이 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경마장 분위기 속에서 김대업 사건 같은 것이 터지면 치명적이다. 언론은 검증없이 그대로 써 제낀다. 이른바 경쟁적 발표저널리즘의 폐해이다. 후보들의 조작에 말려들기 십상이다. 실명이 아니라, 후보 측근이니 선거캠프 관계자니 애매한 근거를 대며 보도하는 행태는 언론윤리 위반이지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

역시 불공정 보도의 원인이다. 투표일에 임박한 폭로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발표하니까 보도한다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진짜 중요한 쟁점들은 건성건성 지나가고 후보들은 이런 틈을 이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 사탕발림 공약들을 쏟아낸다. 복치고 장구치며 얼렁뚱땅 지나가는 선거는 비극이다. 선수를 잘못 뽑으면 그 팀이 망하지만,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엄정중립 안주 말고 시시비비 가려야 본질 벗어난 보도행태 선거에 독버섯

여론조사 과장보도는 유권자 오도할 뿐 부정확한 부정적 효과에 무용론도 나와

많은데, 과연 실현가능한가, 남북한 평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를 세밀하게 검증해 유권자의 판단에 기여해야 한다.

선거연령 18세인하와 결선투표제도 좋지만, 이런 제도변경은 선거에 압박해 내놓을 메뉴가 아니다. 올림픽을 몇 달 앞두고 경기규칙을 바꾸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촛불시위를 보고서야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알았다고 말

의 설왕설래를 정통언론에서 퍼 나르느라고 바쁘다.

언론학자들이 선거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본질을 벗어난 주변적 보도행태인데 지금 그런 우려들을 우리 언론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너무 끌려 다니지 말고 퀄리티 미디어로서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종편패널들의 토론도 후보들의 주변잡사를 안주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대국적·본질적인 시각

언론의 후보검증 부족하면 역사의 대재앙 불러 권력 분산하고 강력한 견제장치로 균형 잡아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결선투표제도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대통령선거 결정방식은 헌법사항이다. 선거법만 고쳐서 시행했다가 위험결정이 나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어린애 같은 소리도 그저 전달하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된다. 엄정중립에만 안주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선거보도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후보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어

에서 어젠다를 골라야 한다. SNS 등 뉴미디어의 문제도 많다. 매체수도 워낙 많다보니 가짜뉴스, 조작정보가 판을 치기 쉽다. 진짜 언론매체인지 아닌지, 진짜 기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가운데 취재를 빙자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 같은 언행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악화의 양화구축을 막아야 한다.

우리 언론이 애용하고 있는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많다. 서양에서도 여론조사의 부정적 효과 때문에 지

고교한국사

좌파에 굴복한 역사 교과서 정책

서옥식
논단

야당은 국정교과서금지법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역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다양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어느 역사가의 문헌에도 없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적지않은 좌성향 학자, 일선교사, 정치인, 언론인, 시민운동가들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의 중요성은 애써 외면한다. 즉 역사가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기록돼야 한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다양성에 우선한다. 해석의 다양성은 그 다음 문제이다. 이는 역사 해석이 사실에 입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없는 해석은 허구(소설)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기술은 국정과 검정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르는 팩트의 문제로, 어느 쪽이 팩트를 기술하고 팩트의 바탕 위에서 역사를 해석하느냐로 귀결된다. 역사관은 세계관이며 어느 한 나라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관은 곧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된다.

지금 친북좌익용공세력의 소위 ‘민중사관’으로 쓴 검인정교과서를 허용하라니 나라를 온통 그냥 북한에 내 주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역사기술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legitimacy)과 정당성(justification), 합법성(lawfulness)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사용하는 검정 역사 교과서의 기술내용 한 토막을 보자.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1948년)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남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한국사, 두산동아출판사, 2016, 273쪽)

남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의원들이 북한의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최고권력자인 수상으로 선출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조선

정부가 좌편향 역사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야당과 좌파학자·교육감·교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지난 1월 20일 세칭 국정교과서금지법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고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는 이와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결의안’도 가결했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1월31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수정본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본회의 상정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역사교육을 둘러싼 ‘사실(事實: fact)’과 ‘다양성(多様性: diversity)’의 1차 전쟁에서 사실이 다양성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는 국정·검정의 선택 아닌
참과 거짓을 가르는 팩트의 문제북한교과서를 베껴 북한 미화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합법성을 훼손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즉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체주의국가 김일성독재정권을 남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세웠다는 이 기막힌 내용이 박근혜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8월 이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현재도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이같은 기술은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대백과사전’, ‘광명대백과사전’ 등 각종 문헌과 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 등 보도선전물 등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 교과서가 북한교과서 등의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

북한 교과서 등 문헌들을 보면 ①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 남한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868만 1천 746명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천 407명이 투표에 참가해 1천 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 인민대표가 1948년 8월 21일 북한으로 넘어와 8월 25일 해주의 인민회당에 모여 360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뽑았고 기술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8월 25일 총선거를 실시, 총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해 98.49%의 찬성으로 212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에따라 남북한을 대표한 총 572명의 대의원이 헌법채택과 함께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는 것이 북한 문헌들의 기록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격하해도 된다니...
왜곡도 스스로 없는 검정교과서 최악의 기술

김일성이 이승만의 남조선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 전조선적인 중앙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한 전역에 걸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남한의 국회의원에게 해당)을 뽑는 총선거 방침을 교시, 1948년 8월 남북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됐으며, ②여기서 당선된 대의원들이 그해 9월 8일 평양에서 속개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이던 김일성을 내각수상(국가수반)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③이에 따라 김일성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조선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정부를 조직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민공화국이 남북한의 총선거에 의해 수립됐다는 조작된 내용을 근거로 그들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자 정부라고 억지 주장을 펴왔다. 문제는 우리나라 검·인정 교과서도 이러한 북한의 장단에 맞춰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즉 ‘건국’으로 기술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부수립’ 또는 ‘대한민국정부출범’이라고 표현, 그 의미를 축소, 비하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으면서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야당과 좌파 학자들에게 굴복, 올해 새로 개발된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시

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검·인정 교과서들은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편향 일변도로 다양성을 상실했다. 지난해 검·인정교과서가 8종(種)이었지만 교학사 발행본을 제외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용이 비슷한 ‘1종의 획일적인 봉어빵 교과서’가 되고 말았다.

역사에서 사관(史觀)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관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흔히 영국의 역사가 카(E. H. Carr)의 사관을 ‘주관적 역사관’이라고 부르지만, 그 자신은 사실을 매우 중시했다. E.H.카는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It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라고 말했다.

역사기술은 사실(事實: fact)에 역사가의 세계관(가치관) 또는 이데올로기가 가해져 사실(史實: historical fact), 즉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탄생한다. 하지만 사료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의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는 역사 기술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역사 기술에 있어서 편협한 사고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아주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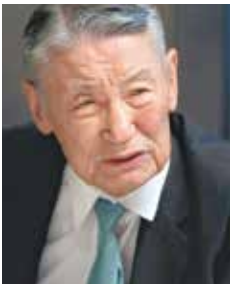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진위(眞僞, true/false), 정사(正邪, right/wrong), 선악(善惡, good/bad), 미추(美醜, beautiful/ugly), 객관적으로 타당한 견해와 주관적인 편견(objectively reasonable views/subjective prejudices)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누구나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초경험적인 것, 주술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역사가의 사명은 이래서 중요하다. 장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존재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만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회 편집위원)

회우 포럼

이 시대의 난제 ‘탄핵’과 ‘언론’

헌재 탄핵심판과 민주주의



남 시 욱
본회 회우
전 문화일보 사장

국회가 지난 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 역시 심리를 서두르기 위해 당일 늦은 시간부터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라는 헌법적 절차로 귀결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크게 다행한 일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소추를 받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 대통령에게도 허용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일반적 주장에 근거한 사상누각”이라면서 “공정치 못하고 정치적 중립도 어겼다”고 맹비난했다. 셋째,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과 박 대통령의 역할 및 책임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정보는 언론보도와 검찰의 기소장 내용,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증인들의 증언뿐이다. 재판의 결과 사실이 확정되어야 진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넷째, 박 대통령 이 사건의 전모가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촛불시위 때문에 사퇴한다면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모두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다. 후세의 역사기록을 위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밝혀져야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심의기간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및 법률 위반 13건으로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본인이 위반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헌재가 사실확정에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변론에서도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박

참회 자립 창조가 개혁의 길



김 진 현
본회 회우
전 과거처 장관

대한민국의 2017년은 역사의 반복이나 숙명론을 거부하고 새 역사 창조의 길을 열 것인가의 결정적 갈림길이다. 정치가 협치와 4강 극복의 안보라는 새 틀을 창조하고 광장의 촛불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대 반동’(The great Reaction)의 역풍을 뚫고 통합 융화하는 새 질서로 승화하는 데 성공하느냐에 달렸다. 그 성공은 대한민국만의 성공을 넘어 괴물 요물들의 등장으로 인류의 보편 가치와 이상이 허물어지고 있는 지구촌에서 새 희망 새 패러다임 창조의 중심에 우뚝 서는 것이다.

2016년에서부터 전개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변 특히 4강의 움직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청일 러일전쟁, 1945~1950년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시진핑, 아베신조, 트럼프와 그 하수인들의 연행에서 한말 한성(漢城)에서 행패 부렸던 위안스카이와 이토 히로부미, 시오도어 루스벨트의 재연을 연상케 한다. 소름이 끼치고 공포감마저 든다.

반도 중심성의 국력창조를 위하여는 첫째 자발 주체 자립의 의식과 행동 혁명이 필요하다. 둘째 주변 4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완전히 습득 소화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 시민 하나하나의 능력이 4강 중 최강보다 더 우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4강에 비하여 양으로는 절대 부족하나 질적 실력은 4강 중 최고보다 높아야 한다. 넷

JTBC의 태블릿 PC 허위 보도



노 재 성
본회 회우
전 국민일보 부사장

종편 JTBC 손석희 앵커와 저녁 뉴스 “뉴스룸” 보도기자들이 지난 해 10월24일 보도한 “최순실 파일” 방송은 엄청난 오류와 허위, 조작이다. 필자가 “유튜브(Youtube)”에 저장된 당일의 방송내용과 12월8일 해명 방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같이 허위 사실이 드러났다.

1. JTBC 손석희 앵커와 취재 기자들은 청와대 보좌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하고 또 출력하여 사용한 한글파일 등 컴퓨터 파일 중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용한 컴퓨터 자료를 입수하고 자사 데스크탑에 입력하였다.

2. 위 JTBC 측은 그 파일 최종저장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최순실이라고 단정하여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먼저 문서를 입수하고 수정하였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는 전무하다.

3. 이 컴퓨터 파일들이 최순실이 받은 것이라고 관련짓기 위해, “최순실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또는 태블릿 PC에서 파일들을 복사하여 자사 데스크탑에 옮겨”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최순실 PC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나 증거도 없고 마지막 저장자가 누군지 고의로 감추고 있다.

4. 컴퓨터 속성상 작성한 문서들을 대통령이 출력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이 출력해야 하며 그 출력자가 문서의 마지막 저장자가 된다.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보았다는 그 시점은 바로 대통령에게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기 위한 보좌진이

박대통령, 헌재서 억울함 입증하라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소홀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소추 사유가 1건 밖에 없는데다가 본인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사실 확정은 쉽게 이루어졌고 그의 헌법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판단하면 그만이었다.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세상일이란 알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가 사실로 확정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률가들은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탄압 등 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관 수가 모두 9명인 현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認容)결정, 즉 탄핵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심판의 경과를 보아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심판이 기대보다 더 걸리더라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한다.

〈광화문문화포럼 태평로산책 2017년 1월호〉

자발 주체 자립의식과 행동 필요

째 4강에 모두 충실한 친구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충실하고 능력있는 친미·친중·친일·친러파를 견고하게 키워야 한다. 이제부터는 눈빛, 몸짓, 가늠과 머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2016-2017년의 촛불이 지긋지긋한 적전분열의 요소로 전락하지 말고 적전화합, 단결의 동력으로 전환, 승화하는 것이다. 4·19, 5·16 군사 쿠데타, 6·29(YS, DJ의 분열 내분)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광장이서도 안 된다.

자발, 평화, 질서, 다원의 시민사회, 한국의 전통에 있어본 적 없는 새 마음 새 몸짓 새 질서—보편적 정의, 보편적 윤리가 앞서서 그런 새 희망의 결실이어야 한다.

한 정권 또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보다 새 가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진실을 우리 모두 깊이깊이 새겨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과 전체주의 괴물이 교차하는 세상이다.

통일을 위하여는 분단만큼의 고생을 각오해야 하고, 자주·자발·자립의 국가를 창조하기 위하여는 경제적·개인적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정의의 공화국을 개척하기 위하여는 스스로가 도덕적·영성적 믿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국가전략포럼 1월7일〉

방송내용 조작·폭로도 오류 투성이

마지막으로 저장한 시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에도, JTBC는 그 시간이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시간이라고 엄청난 허위 보도를 하였다. 만일 그 문서정보의 마지막 저장자가 최순실이 되려면, 최순실이 그 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된 것을 다운 받은 다음 문서저장을 하고 읽고 수정하여 다시 저장해야하는데 JTBC측은 “이메일이나 카톡 등은 PC에서 구동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5. JTBC측은 그러한 오보와 허위 조작에도 불구하고 2016년 관훈언론상, 한국여기자상, 한국언론비평상 등을 특종보도의 공적으로 휩쓸어 수상하였다.

6. 검찰은 JTBC가 제출했다는 태블릿 PC와 그 태블릿 PC의 공식 소유주인 잠적중의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 행정관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소추하게 한 JTBC 측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문제의 PC 파일들을 최순실이 사전에 받아 보았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또한 경찰은 “태블릿 PC 조작 진상조사위원회”가 1월 18일 손석희 JTBC 사장을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계획을 밝히고 즉시 수사해야만 한다.

탄핵심판
방청기

육 정 수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방청객이 심판정에 들어가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미리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해 당첨된 사람에 한해 방청이 허용된다. 심판정 안에서는 규제사항이 더 많다. 조용히 해야 함은 물론, 재판관들이 입정할 때 일제히 일어서야 한다. 법치(法治)와 재판정의 권위, 재판관들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것이다. 핸드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바꿔야 하며, 일반 방청객의 사진촬영은 금지된다. 기자들의 사진촬영도 변론이 시작되기 전 3분 정도만 허용된다.

현재는 그동안 일주일에 2~3차례씩 변론을 진행, '신속한 심리'에 역점을 두는 듯 했다. 당초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다짐했지만 일부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촛불시위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성급한 진단도 나왔다.

아무튼 현재는 박한철 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즉 3월 초순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관련, 박 재판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재판관 7명이 심판에 참여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되어 헌법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월 25일 심판정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측 변호인단은 현재와 국회측이 '신속한 심판'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재판소장은 1월 31일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서도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조속한 결론'에 재차 무게를 실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지난 1월 5일 3차변론에서 양측에 증인들의 출석 및 증거자료의 신속한 제출, 세월호 관련 석명서(釋明書)에 관해 주문을 했다. 또 국회측이 제출한 jtbc 방송의 보도영상에 대해 변호인단

확실한 것 아니면 증거 채택 안해

‘인용’·‘기각’ 영향미칠 중요 변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이 있는 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촛불'과 '태극기'의 심리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정문 앞의 좁은 공간에서 양측은 모두 육성과 각종 구호를 쓴 플래카드를 동원한다. 길가에는 경찰버스들과 소음측정 설비를 실은 '소음관리' 차량이 항상 대기한다. 현재 구내로 들어서면 각 방송 현장중계팀이 천막을 쳐놓고 있고, 심판정 입구에는 수십명의 카메라 취재진이 장사진을 치고 증인들의 도착을 기다린다.

태블릿PC 내용, 증거 채택 안돼 안중범 수첩·언론보도도 제외

국회측은 탄핵사유서 재작성 재의결 없이도 수정 가능한가

에게 “보도된 기사들의 내용 모두가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일찌감치 증거 채택의 선(線)을 그었다.

특히 강 재판관은 “국회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검사(檢事)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니다”면서 “마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양측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청와대측을 향해서는 “형사재판이라면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부

출석 사유서를 제출, 자신의 형사재판 기일(1월 18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재판소장은 “정씨로서는 형사재판의 경우 자신이 피고인으로 돼있는데 비해 탄핵사건은 증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재판 준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 1월 19일에 재소환하겠다”고 정리했다.

1월 16일 6차 변론에는 가장 관심

최순실 “고영태가 ‘게이트’ 폭로 협박” “검찰서 철야 강압수사 당했다” 언론보도 편향 심각...알릴 것 모른 척

인하면 그만이지만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자세한 석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진성 재판관은 청와대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답변서와 관련, 보고와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기재돼 있다면서 ‘대통령의 최초 인지(認知)시점’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있는데, 오전 9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지는 않았는지 보완해 달라”고 했다. 또 “당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돼있는데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1월 10일 4차 변론에는 최순실(최서원), 안중범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비서관 등 증인이 모두 불출석, 1월 16일과 1월 19일로 미뤄졌다. 국회측 변호인은 정씨가 불

이 집중된 최순실씨가 추운 날씨로 두터운 검정색 패딩을 입고 교도관들에 이끌려 심판정에 나왔다.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에 처음 출두할 때와는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에 답변도 또렷했다.

최씨에 대한 양측 변호인단의 주요 신문내용.

◇ 국회측 변호인 신문

—청와대에 들어갈 때마다 대통령을 만났나?

“아니다.”

—개인적 이익 위해 국가권력 사용한 적 있나?

“없다.”

—세간에서는 당신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는 관계였다는 설도 있는데?

“말도 안 된다. 나는 정치의 각 분

야를 모르는데, 왜곡된 얘기이다.”

—정호성과 메일 주고받는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나?

“몰랐을 것이다.”

—만약 알았다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겠는가?

“그런게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것이다.”

—개인적 채무를 갚아주거나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없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씨는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본 적도 관심도 없었으며, 그 이름을 자기가 짓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측 변호인 신문

—대통령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이 잘 관리되고 있나를 관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아닌가?

“그렇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당신이 돈을 안 먹어 다행’이라고까지 말한 적도 있다.”

—증인은 고영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심지어 ‘개네들’이 사건을 조작했으며, 고영태가 증인을 협박했다고 진술했는데?

“신용불량자인 고영태가 몇 번 사업비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앙심을 품은 것 같다. 2014년인가 대통령 임기말에 ‘게이트’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들은 ‘이진동 기자’도 끼어있다. 그들은 게이트 자료를 TV조선에 넘기겠다고 했다. K스포츠재단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공무상 비밀 또는 1급, 2급 등 기밀 등급이 적힌 서류를 정호성에게서 받아본 적 있나?

“없다.”

—대통령은 관저에 혼자 있고, 정호성 등 남자가 도와줄 일도 한계가 있으니 증인이 영부인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

—연설자료에는 어느 정도 개입했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꾸는 정도였다.”

—태블릿 PC는 사용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다. 검찰조사 때 압수된 태블릿 PC를 보여달라 해도 안 보여줬다. 자기들의 목표대로 수사를 몰고 갔다.”

—국회의원 시절을 포함해 대통령의 영향력이 증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도움을 준 적은?

홍용수 회우 자산 관리 특강

법을 알고 부동산 세금 줄여라

1순위 조건·재당첨 제한에다 입주 전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2016년 12월 9일부터 모든 대출 원리금을 합쳐 고정금리 방침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도입되어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간편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2016년 12월 초부터 서울 집값은 3대 대형 악재(부동산·대출 규제, 정국불안, 수출부진 등)로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부동산은 매입 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 향후 개발계획이 있어서 미래가치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면, 매입 시점에서 위험요소, 매각전략, 투자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근 지역보다 약 30% 싸게 사야 한다.

부동산 매입 시 잔금 치를 때는 등



홍용수
본회 회우
NSI자산관리연구소
명예회장

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양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2년 보유 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는 비과세다. 다주택인 경우 마지막 매도는 양도세가 가장 많은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만들어 매각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도 있다. 모든 부동산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다.

주민등록상 1가구 2주택 되면 먼저 매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잔금을 받기 전에 동거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독립세대로 옮겨 놓으면 된다.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거

미래가치 증대 가능성 있어도 위험요소·투자기간 검토해야

기부를 다시 체크해 보고 인감증명 등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입회 하에 날인 받는 것이 좋다.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은 절대 중도금이 잔금 지급을 피해야 하고, 의심이 나면 인감증명을 발행한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매시점을 알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

나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 또는 매각 시기를 조절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세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기산된다.

해외시민권자의 국내자산 매각 시 매도자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자유민주의 가치 수호’

노재봉 전 총리 등 130여명 모여 창립총회

한국자유회의가 1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한국자유회의(Korea Freedom Congress)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문제를 성찰해 온 노재봉(盧在鳳) 전 국무총리(서울대 명예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원로와 활동가,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연대체(連帶體)이다.

한국자유회의

노 전총리는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가 발행하는 월간 <대한언론> 2017년 1월호에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전체주의 세력과 대결을 다짐한 자유회의 창립대회

자유민주진영 원로·활동가들 모여

어디인가’ 제하의 특별기고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투쟁은 자유민주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한국자유회의에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작가 복거일씨,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영훈 서울대 교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조갑제닷컴 대표),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 이주천 이승만포럼 공동회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박석홍 대한언론 주필,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류석춘 연세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차기환 변호사, 인지연 변호사, 조성환 경기대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교수, 서명구 (사)2020통일한국 연구위원 등 중·장년층 활동가와 지식인 130여명이 발

기인으로 참여했다.

한국자유회의는 창립취지문에서 현재 상황을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는 헌정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목소리까지 노골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참여한 조성환 교수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정책강령에 대한 평가 등 현안에 대한 논쟁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당장의 정치적 행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지적(知的)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옥식 편집위원

18면에서 이어집니다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해서 그런 일 없다.”

—작년 10월 15일 담화 때 대통령은 ‘과거 증인에게 도움받은 일 있다’고 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울먹이며) 이런 사태가 와서 죄송하다.”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 없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

“내가 없는 사이 컴퓨터의 e-메일 자료를 몰래 빼갔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받으며 강압수사와 모욕, 폭언을 당했다는데?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돌아가면 여러 사람이 들어와 폭언과 강압수사를 했다.”

청와대측 변호인은 “처음 일주일

정도는 변호인 입회도 허락하지 않은 적 많다”고 보충 설명했다.

◇국회측 변호인 신문

—사무실의 데스크 탑에서 (정호성 과의 e-메일 내용을) 훑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켜놓은 상태였을 수 있다.”

현재, “직접 보거나 들은 얘기만 신문하라”

—고영태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 받았나?

“말하지 않았다.”

—수사를 의뢰했나?

“안 했다.”

—왜 증인이 그들을 살살 달랬나?

“부끄럼 없지만 수사의뢰하고 싶지 않았다.”

최씨에 이어 안종범씨에 대한 국회측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시작

되자 박 재판소장은 유도신문을 삼가고, 증인의 ‘생각’이 아닌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쟁점을 요약해 신문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서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강압수사와 밤샘수사 주장을 편 최순실의 검찰

진술조서,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은 태블릿 PC 내용, 언론보도 내용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술내용 중 영상녹화 부분은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와 안종범의 수첩내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되, 일상적 공무(公務)에 관한

것과 ‘수첩이 나왔다’는 사실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재판소장은 “이제 증거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시겠지요? 확실한 것이 아닌 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수 있다.

증거채택 원칙을 밝힌 후 국회측 변호인단은 다급했던 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해 1월 23일 현재에 제출했다. 과연 국회의 재결 없이 탄핵사유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 일반재판에서의 검찰 공소장 변경처럼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

또 같은 날 청와대측 변호인단은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으나 이중 10명만 채택됐다.

THE PEN

북한로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나, 요즘 은퇴 언론인들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비난 받는 신세가 되었다. 확인하지 않은 날조 기사와 중편방송의 인신공격성 토론이 주공격 매뉴다. TV 신문은 엘로우저널리즘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진다. 대통령 탄핵에 큰 공을 세운 한 신문은 10여만 독자가 신문 구독을 거절했고 한 재벌신문도 많은 독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600 원로 회우들의 기자정신은 살아 있다.

2월호 대한언론은 ‘언론의 반란’이라는 공격까지 받는 언론의 편



〈편집자의 편지〉

대한 전문 언론인들의 긴급 진단도 주목할만하다. 동아일보 최장수 일본특파원을 역임한 정구종 회우(동서대석좌교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흔드는 소녀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정공백 상태나 다른 없는 한국이 냉엄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초월한 거국 일체의 확고한 대일(對日)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문제 전문 외신기자였던 한영탁 회우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치사한 대한(對韓) 경제제재를 고발하고 더불어 민주당 서영길 의원 등 8명이 중국의 사드 반대편을 든 사대

원로 언론인들 다시 취재현장에 섰다

향보도와 윤리 문제를 최서영 원로 회우와 유자효 김광섭 편집위원이 고발하고 조갑제닷컴대표가 한국 언론이 왜 북한 로동신문의 칭찬을 받았는가를 심층 분석했다. 대한언론 2월호에는 은퇴 언론인들이 발로 뚫은 기사들이 많다. 서옥식 편집위원은 촛불시위 현장을 취재해 주도세력 목적 우려되는 사태를 정리하고, 일간신문이 눈감아준 촛불 시위현장의 현정파와 세력의 만행도 고발했다. 최명우편집국장은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들고나온 국민들의 열의와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정리했다. 2월호 기사중 가장 공들여 만든 기사는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주요 변론 현장들을 취재한 육정수 편집위원의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기다. 육 위원장의 현재 방청기는 일간 신문과는 달리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룬 객관적인 기록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이 혼미한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의 압박에

주의 행각을 비판했다. 이동복 원로언론인(전 한국일보기자)은 탄핵 파동의 여파로 친북좌파정권이 재출현할 경우 미국이 재래식 비핵 첨단무기를 동원하는 선제적 군사 타격으로 북한 핵 및 미사일 기지를 제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략 분석하며 트럼프정부가 한반도를 미래지향형의 새로운 벤처 투자형 기지로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구월한 회우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보도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대로 가면 선거보도도 실패하고 나라도 위태롭다고 경고하며 언론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민병돈 전 육사교장 김일수 고대 명예교수 전성환 한국정치외교사 학회장의 전문가 특별기고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조성환교수는 축제로 위장된 핏발선 촛불집회가 전체주의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민족지상주의 적 반동세력’에 의해 조직 되고 선도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홍 본회 편집위원장

요즘세상 - 요즘세태

표창원 의원님, 표현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 대통령을 매춘부 그림으로 풍자한 누드화 논란이 설날을 앞둔 여의도를 강타했다.

표창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원 회관1층 로비에 서 ‘곧, BYE! 展’을 기획했다. 그 중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표 의원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함께 곧 파면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곧, BYE!’라고 제목을 붙였다. 정작 전시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국회 사무처로부터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대관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림들은 곧장 국회와 이별을 고했다.

지난해 말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광장에는 단두대 등 대통령을 풍자하는 상징들이 나타났고, 법원이 청와대 100미터 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최진녕

변호사

판단했다.

공적 인물은 강한 정도로 공개적인 풍자의 표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된 표현은 예상되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보면서, 인간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내밀영역의 핵심인 성적 형태의 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인간의 명예의 핵심에 대한 침해의 경우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존재하게 되고, 예술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사건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기준에 대입해 보자.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사당에서, 몸을 파는 여성의 알몸 그림에 여자 대통령의 얼굴을 붙여 넣고, 아랫배와 그 아랫부분에 아버지의 얼굴과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그렸으며, 제목에 ‘더러운’이란 말까지 넣은 그림이라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내밀영역

“여성비하 · 인권모독을 정당화 하다니...”

자유가 폭발적으로 확대됐다. 그렇다고 여성 대통령의 나체를 풍자한 그림이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것인가.

표 의원 측 작가들은 사무처의 철거 결정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예술은 그 어디서든 표현되고 전시되어야 하며 그 품격의 기준은 오로지 대중의 몫이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표 의원이 대통령 나체 그림을 국회의원 회관에 전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투표자 81%(14,936명)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모독이고 여성비하다.”에 찬성했고, 19%(3,550명)만이 “대통령은 공인.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17. 1.26. 07:00기준). 국민 10명 중 8명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본다는 뜻이다.

한국 헌법의 고향인 독일은 어떻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주 수상을 교미하는 돼지로 표현한 풍자만화 사건에서 풍자만화가 예술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예술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의 핵심에 속하는 “성적 형태의 표현”으로서 피해자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비열한 여성 인격 모독 행위”라는 성명을 통해 “그림은 대한민국이 지켜 온 여성성 · 인간애 · 예의 등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행위”이자 “잔인한 인격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설날 민심 악화를 걱정한 민주당 조차 비판적인 입장을 내 놓자 전날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하던 표 의원은 입장을 바꾸어 “여성분들께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말했다.

하지만 법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작 직접적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의 필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우리 헌법과 달리 독일 기본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개헌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大韓言論 일반독자 정기구독 시행

명기자 명데스크 출신 언론인 600명이 쓰는 정론지

월간 회보 ‘大韓言論’이 편집 스타일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독자들의 요청으로 발행 부수를 늘리는 동시에 비

회원 일반인의 정기구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 본회 회우를 통하거나 직접 구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실, 대한언론인회

전화 02) 732-4797, 4798. 이메일 kjc1405@hanmail.net

△후원 구독료: 연 3만원. △입금계좌: 농협 056-01-105628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준하 (전 동아일보 기자, 강원일보 사장) 회우가 1월 16일 밤 별세했다. 향년 87세.

평소 건강하고 온화한 성품에 낙천적으로 지내온 김 회우의 별세는 많은 회우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강원도 철원 태생으로 6. 25 참전 후 제대하고 고대 정치학과 졸업,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디뎠다. 4. 19 혁명 직후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다시 언론계로 돌아와서 동양통신 기획조사부장으로 잠시 머물다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대농화학 대표이사, 동부고속 대표이사, 동부 대표이사, 동협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강원일보 사장으로 봉직하고 퇴직했다.



김준하 회우

이순기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원로회우가 작년 8월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6세.

이 같은 사실은 우경식 원로회우가 지난 1월 초故 이 회우의 면목동 집을 인사차 방문했을 때 가족들이 “이 회우께서 작년 8월 13일(토) 숨져 8월 15일 가족장으로 이천 호국원에 안장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 회우는 작년 봄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순기 회우

문명호 (전 문화일보 주필) 회우가 지난 1월 3일 오후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문 회우는 1940년 1월 생으로 만 77세 생일을 25일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치고, 졸업 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출발, 경제부 외신부 기사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했다.

외신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후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으로 주필까지 지냈다.

고려대 신방과 교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공정언론심의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문명호 회우



대한언론인회와 동아일보 회우들이 헌화하고 있다.

이무슨 청천벽력 비보인가

——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이순기 선생! 뒤늦게 선생의 부음을 접하니 무어라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만해도 요양병원에서 투병중이었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입니까.

선생과 저는 6·25참전언론인회 회원으로 대한언론인회에서 가끔 만나곤 했지만, 이렇게 홀연히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선생은 6·25 참전 동지이기도 하지만 대한언론인회와는 그 누구보다도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으로 ‘대한언론’ 제작에도 심혈을 경주하셨고 한때 회장이 되시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일은 대한언론인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 징표였습니다.

사실 선생의 신문 편집 실력은 한국일보 견습 1기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고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를 거치면서 더욱 각광을 받으셨고, 한국신문편집기자회 초대회장으로 많은 편집기자들의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이토록 신문 편집의 대가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던 선생이 작년 8월 외롭게 타계하셨다는 비보를 6개월이 지나서야 접한 우리들은 망연자실 유가족 여러분께 무슨 말로 위로의 말씀을 올릴지 할 말을 잊습니다.

늦게나마 6·25참전언론인회를 대표해 삼가 명복을 빌며 아무쪼록 모든 번뇌도 아픔도 없는 저승에서 부디 영생극락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회우는 1930년 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거쳐, 미국 콜럼비아 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54년 창간한 한국일보에 이듬해 수습 1기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60년에 조선일보 편집부 차장, 68년 중앙일보 편집부장, 69년 대한일보로 옮겨 편집부장, 뉴욕특파원 편집부국장, 외신부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겸 외신부장, 기획위원을 지내고 언론계를 76년에 떠났다. 이후 해외개발공사로 전직, 개발과장, 조사연구실장, 이란 지사장, 호주지사장을 지냈다.

두 손 모아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소서!



이병대 회장이 조사를 올리고 있다.

어찌 이리 급하게 떠나셨나

—— 이병대 (대한언론인회 회장)

문명호 형!

어찌 이리도 급하게 떠나셨습니까.

송년회에서 만나 새해 들어 곧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이 20여일 전인데 홀연히 떠나시니 생과 사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生死不二)이라는 의미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문 형과 저는 지난 65년 동아일보사 수습 7기 동기생으로 언론계에 함께 출발한 뒤 지금까지 어깨동무하여 살아왔습니다.

수습기자 시절 우리가 어릴적 노래 불렀던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신고’라는 동요의 가사를 문형이 초등학교시절 작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었죠.

돕고 도우면서 그러나 때로는 생각을 달리할 때도 있었지만 배려의 마음은 서로가 지우지 않았습니다.

문명호 형!

문형은 동아일보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비롯하여 논설위원 등 핵심자리를 거쳐 문화일보에서도 논설주간을 맡는 등 우리나라 언론문화 창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에는 대한언론인회에서 주필직을 맡아 대한언론회보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문명호 형!

문 형은 평소 부인과의 정이 남달랐습니다. 작년 부인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서울대학병원 이 자리에서 문형을 뵈었을 때 너무 얼굴이 상하여 몸을 돌봐가면서 장례를 치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뒤에 들으니 몸이 많이 약해져서 계속 병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 이렇게 홀연히 떠나버리시다니! 인간사의 허무함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문 형!

그간 이승에서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을 훌훌 던져버리시고 평안히 잠드소서.

두 손 모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호 애재라!

신년 덕담 아직도 생생한데

—— 김광희 (전 동아일보 이사·제작국장)

지난 1월 5일, 새해를 맞아 가진 점심 자리에서 나는 덕담이 아직도 생생한데 뜻밖에도 幽明을 달리하게 된 갑회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18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대한언론인회의 추도식에 참여한 대부분의 문상객들이 他界 하루 아니면 2~3일 전에 식사를 같이했다는 얘기라서 모두들 인생무상을 곱씹으며 새삼 김 선배의 폭넓은 交遊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제가 김 선배의 高名을 들은 것은 1960년 3월쯤 자유당 정부의 3·15 정부통령 선거 선거법지령전모(부정선거)를 동아일보에 특종보도, 4·19 혁명과 민주화를 가져오게 한 계기를 마련했을 때로 기억하며, 그때 저는 서울신문 견습기자였습니다.

제가 김 선배를 직접 뵈게 된 것은 청와대 대변인 때로 기억하며, 당시 저는 동아일보 체육부에 있었는데 누가 걸걸한 목소리로 처음 보는 친구구만 하면서 먼저 인사를 청하는 바람에 안절부절 못했던 걸 기억합니다. 특히 제가 高大출신이라고 답하자 갑자기 얼굴색이 달라질 정도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김 선배의 高大와 東亞日報에 대한 애착은 정평이 나 있지요.

2015년 12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東友會(동아일보 사우회) 총회 때는 약 4백여 명의 현역과 퇴직사우들이 모였는데, 이때 김 선배는 격려사를 통해 동아의 전통과 권위를 회고하다가 돌연 “조·중·동이 뭔가?”라고 질타하시면서 장내를 숙연하게 한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보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 그것은 대인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 선배는 또 54년 獨島기행문을 단독 보도하면서 燈臺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 실현시킨 사례를 늘 자랑하셨습니다.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9개월, 수습기자 6개월을 빼면 겨우 3개월짜리 기자가 국회조사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 일장기를 검은 페인트로 지우고 태극기로 바꾸면서 등대의 필요성을 강조, 李承晩 대통령의 재가(裁可)로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金準河 선배님, 짧았지만 신문기자가 지켜야 할 덕목과 노력의 흔적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2016년 ‘방송기자상’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관하는 제25회 2016년 BJC보도상 ‘올해의 방송기자상’에는 뉴스부문, 기획보도부문, 지역보도부문, 뉴미디어부문, 특별부문에서. KBS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연속 단독보도 등 9편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뉴스부문

〈본상〉KBS 이예진, 노윤정, 김유대, 김명주, 심수련 기자 =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연속 단독보도

◇ 기획보도부문

〈본상〉KBS 정창화, 홍찬의, 임승창, 최광호, 이상구, 김상민, 한규

석 기자 = 『시사기획창 - 1편. 국회의원과 돈, 2편. 국회의원의 약속』

◇ 지역부문

〈본상〉TJB대전방송 노동현, 채효진, 윤상훈 기자 = 『고교 엉터리 채점모로 ‘성적 정정 321건’』

◇ 뉴미디어부문

〈본상〉YTN 함형건, 김수진, 이상엽 기자, 권오은 리서처 = 『비극의 재구성: 펀치볼 지뢰 지도』

◇ 특별부문(해설논평)

〈특별상〉CBS 김승동 논설위원장, 박종률, 이재웅 논설위원 = 『오늘의 논평』(論評)』

대한언론인회 검도회 발족

매주 月·土 정기모임

대한언론인회 5명의 검도인 회우가 지난 연말 검도회 창립 모임을 갖고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월요일 2일간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 프레스센터에서 가까운 체육관에 모여 김성주 검도사범(대한검도회 6단)의 지도로 시작할 계획이다.

검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팔다리 관절만 매우 나쁘지 않으면 70세 회

우도 문제없이 앞으로도 20년간은 건강하고 기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평생운동으로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초보자들은 1개월간 죽도로 기본기 운동을 배운 후 정식으로 검도복과 방호구를 구입하여 검도의 본, 조선세법, 대련 연습에 들어간다.

창립회우: 이도형(4단), 정일화(4단), 정용석(2단), 김영환, 김화 (연락: 정일화 010-8788-3836)

대한언론 주필 겸 편집위원장 박석홍

본회는 공식중인 주필에 박석홍 편집위원장을 겸임 발령했다.

박 주필은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출판국장, 외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건양대 대우교수, 언론법학회 감사, 독립기념관 감사를 역임했다.

찬조금·연회비 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미납회비 부탁드립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6. 12.20~ 2017. 1.20)

이병대 회장, 찬조금 200만원 기탁

이병대 회장은 지난 해 취임 당시 1천만 원을 기금으로 쾌척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어려운 재정 사정을 예감하고 200만원을 지난 1월 2일 기탁했다.

〈찬조금〉

이태영 30만, 정운종 10만, 신대근 10만, 박석홍 10만, 조재린 10만원

〈연회비〉

김 화 (17),	양성목 (17)	정두진(17),	이병대(16, 17),	박문두 (17),
이성춘(15, 16),	김호기(17),	맹태균(16, 17)	오동환 (17),	박 실 (17),
박범진(17),	임판호 (16, 17)	조재린 (17)	고덕환(17),	김규문(17)
임한순(17)	김경대(17),	이창열(17),	정용쇠(17),	윤홍섭(17),
최재규(15),	이상호 (17),	송선무 (17),	이우진 (17),	박석홍(17),
문 청(16,17),	현소환(13~ 16),	고두현(16,17),	김경중(16,17),	박응수(16,17),
노진호(17),	이재권(16,17),	한상규(17),	최선록(17),	이향숙(17),
최귀조(17),	임종건(17),	나용경(16),	윤산학(17),	이태영(17),
김수웅(17),	이철영(17),	정재필(17),	김휴선(17),	황선용(16),
신동식(17),	소재필(16, 17),	민정기(17),	유재철(17),	최연석(16,17),
홍원기(17)	도준호(17)			



시상식과 함께 원로회원 위로연을 가졌다.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

KBS 뉴스7 이승기 앵커 수상

원로 방송인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인동우회는 구랍12월 9일 KBS 본관에서 제25회 바른말 보도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수상자는 KBS 뉴스7을 진행하는 이승기 앵커.

이날 행사에선 원로회원 위로연도 함께 열렸다.

사우회 소식

제15대 회장 이흥주

KBS

1월 17일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제15대 임원을 선출했다. 새 회장은 이흥주, 감사에 신홍식 이동섭 회우가 선출됐다. 임기는 정기 총회가 열리는 2월 24일부터 2년간이다.

영화감상회 성황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우회는 1월 25일 새해 첫 ‘영화의 날’을 갖고 일본의 명장 구로자와 아키라(黒澤明)감독의 ‘7인의 사무라이’와 이를 번안한 최신 서부영화 황야의 7인(The Magnificent Seven)을 함께 감상했다.

百壽 원로 김진섭 회우의 감사 편지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를 맞은 김진섭 재미 원로 회우가 1월호 회보에 실린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감사 편지를 메일로 보내왔다.



“회보에 이 늙은이를 보도해주시고 회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친지들이 최근 한국의 사태에 대한 대한언론인회의 논지를 과연 원로 언론인들의 평견이라고 호평을 하며 흐뭇해

하네요.

이곳 미주 발행 신문과 TV에서 시위에 150만 동원 등등 연일 보도하는데 참가인원의 성분이 촛불 군중은 이해관계 때문에, 태극기 군중은 자진 시위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곳 교민사회도 알고 보면 작은 서울 사회의 재판 같습니다. 하여튼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본회 임원 신년하례회

1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 임원들의 신년하례식. 37명이 참석해서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에도 협회 발전에 적극 노력 할 것 등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사진=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 주소 변경 ▶

정진철 회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1로 100, 미켈란쉐르빌 D동 1207호

김우상 회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길 12, 문래자이아파트 106동 1402호

▶ 회우 경조사 ◀

결 혼

한경석 회우 = 1월 22일 차녀 결혼

부 음

성재삼 회우 = 1월 17일 모친상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편집위원장 겸 주필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대한언론인회

백내장 정밀 검진 및 수술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대한언론인회 회원 및 직계 가족
- 사업내용: 백내장 정밀 검진 및 일반 (단초점) 백내장 수술비 대한언론인회 전액 지원
(양안 단초점 백내장 수술 비용 40만원 상당)

2. 신청방법

- GS안과 대표번호: 02-3469-0900
- GS안과 박유나 팀장: 010-8725-3334
- (※ 상담 예약시, '대한언론인회' 회원이심을 꼭 말씀해주세요)

3. 제휴안과

- 업체명: 강남GS안과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8층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출구)



I·SEOUL·U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노후 불량 건축물 도시환경 정비 천호1구역



저이용 공공시설, 토지 활용사업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플랫폼 창동61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저층 주거단지 조성



재난위험, 열악지역 정비 정릉스카이, 강남아파트



역사문화보존 및 진흥 돈의문박물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도시재생 리츠에서 마을자산을 활용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까지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Seoul Happiness **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16.9.1부터 법인명이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